

의 변화이다. 종래 근대의 국가를 단위로 하는 국민주권이론이 수정을 받아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국민의 주권은 세계사회에서 세계시민의 자격을 갖는 개개인의 지위를 인정하는 주권론으로 기술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인권론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동안 국가단위안에서의 인권보장 뿐만 아니라 세계시민으로서의 인권보장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세계적 차원의 인권선언문이나 조약들이 훨씬 개별국가의 헌법의 우위에 서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헌법원리의 체계나 인권의 체계에 있어 국제평화의 관점, 문화사회의 실현 등을 중심에 두는 헌법이론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런 인식하에서 법학공부를 하고, 법률가와 국가공무원, 시민운동가, 일반 시민이 되는 사회가 지금보다는 훨씬 국민주권이 민주주의로 확대되는 사회임에 틀림 없을 것이다.

토론

<한국의 시민사회와 인권>  
에 대한 토론

이 경 주  
(인하대 교수)

## <한국의 시민사회와 인권>에 대한 토론

이 경 주

(인하대 교수)

강경선교수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새천년을 맞으면서 21세기에 대하여 뭔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21세기는 정보화시대, 21세기는 지구촌시대, 21세기는 뭐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언설이 저 나름대로의 의미 내용을 갖고 있겠지만, 법학에 있어서 21세기는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아니 코페르니쿠스적 인식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권에 대한 진보적 상상력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강경선교수님의 한국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위한 화두로서의 인권에 대한 성찰적 고민은 그 의미를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그간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회적 담론 가운데서 인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전통적인 자유주의법학에서는 법학 특히 헌법학의 목적을 개인의 인권보장에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위하여 주권이 복무하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전통적인 진보법학에서는 아무리 정치한 인권이론을 구성한다하더라도 민중주권의 실현없이는 인권의 실체적 보장이 없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권에 대한 상반된 인식은 헌법실천의 측면에서도 편차를 보였습니다. 전자에서는 인권을 지고의 가치로 그래서 물신화시키는 경향이 있었으며, 후자에서는 인권의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중시하여 인권의 실체적 절차적 보장보다는 그 허구성을 폭로하는 일에 중점이 두어졌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진보법학 진영내에서도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인권에 대한 코페르니쿠스적인 인식전환의 목소리가 많았지만 많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강경선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인권도 주권(민주주의)의 실현에 복무하여야 한다는 언급도 그러한 인식전환의 대표적인 언설이 아닌가 합니다. 이는 인권을 중시하기는 하되 개인주의적인 사적 영역을 살찌우는데 봉사하는 인권이 아니라 연대성에 기초한 인권이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회권의 강조는 전통적인 자유주의법학의 인권인식과도 일정한 차이가 있으며, 인권의 이데올로기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의문사진상규명법' '민주화보상법'과 같은 구체적인 법해석에 있어서도 실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전통적인 진보법학과도 다른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식전환은 사실 국가와 사회에 대한 전통적 인식의 변화, 한국 사회의 사회운동의 지형변화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그간 법인식과 법실천에 있어서 치열한 대립양상을 보여왔던 전통적인 자유주의법학과 진보법학은 그 대립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이론론적 사고에 공통적으로 기초하고 있었다 할 것입니다. 다만 관심영역은 사뭇 달랐다고 할 수 있겠지요. 거칠게 얘기하면, 전통적인 자유주의법학이 사회영역 그러니까 예정조화설과 사적자치에 움직일 영역을 중시하였다고 한다면, 진보법학 내에서는 국가영역 그러니까 계급지배의 도구로서의 국가의 본질이 치유되지 않으면 사적 자치는 부르조아만의 자치이고 따라서 국가의 본질을 폭로하고 새로운 계급권력의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뭐 이런 점에서의 차이겠지요.

그런데 후자의 입장과 일정한 궤를 같이 하는 현실 사회주의가 일부국가를 제외하고는 붕괴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주의를 민주주의이념으로 재생하자, 시민사회를 복원하자 뭐 이런 움직임이 일어 났고요, 강경선 교수님이 발표문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도 전통적인 민중운동시대로부터 시민운동이 상당부분 그 역할을 대신하는 양상이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국가영역과 사회영역의 중간쯤에 위치하는 시민사회영역이 새로운 사회변혁의 실천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현재의 이론상황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이 시민사회 영역을 확장하는 화두가 인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강교수님의 발표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한국의 시민사회와 인권' 뭐 이렇게 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어떻다는 얘기가 있는데 비록 제 희망적 해석일지는 몰라도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토론자로서 그냥 잘했다는 얘기만 하고 들어가면 좀 그러니 두가지만 여쭙고 싶습니다.

첫째 민주주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하는 점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연하자면, 이렇습니다. 물론 민주주의만큼 다의적인 개념이 없습니다만, 전통적인 법학에서의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을 기초로 하는 사상원리, 기구원리, 방법원리(예, 다수결)의 통일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발표문에 따르면 강경선교수님께서서는 민주주의를 전통적인 법학에서의 이해와 달리 이념화된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것인지가 우선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일 이념으로 이해한다면 그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민중이 지향하여야 할 경제적·정치적·인간적 해방의 이념으로 격상시켜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하는 논의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한 말씀하여 주시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민사회영역에 대한 일정한 평가 그리고 인권을 통한 민주주의의 확장에 공감하더라도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많은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강교수님께서서는 기득권문제와 관련하여 언급하시면서 문화주의적 방법, 정서의 순화와 상호공존의 마음 등에 대하여 언급하고 계십니다만, 전통적인 방법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 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타 몇가지 사항이 더 있습니다만, 저에게 한정된 시간도 있는 것 같으므로 다른 기회를 활용하기로 하고 이만 줄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 제

## 중국의 사회주의와 인권

- 중국적 인권 개념에 대한 철학적 시론 -

조 경 란

(성공회대 연구교수)

## 중국의 사회주의와 인권

### - 중국적 인권 개념에 대한 철학적 시론 -

조 경 관  
(성공회대 연구교수)

#### I

인권은 세계적 담론이 되어가고 있다. 이 현상은 인권 자체에 대한 인식이 보편적으로 확산되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인권 실행의 측면에서는 인권의 보편성이 토착적 문화와 결합될 때 그 실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현실적 인식에서 문화상대주의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가는 추세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인권의 실행은 관습 규범 가치 등 사회 문화의 전반적인 여건과 정치 경제적 조건을 무시한 채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인권의 보편주의적 입장, 문화적 상대주의 입장 양쪽 모두가 서로 한 발 물러서서 서로의 공통점과 더불어 차이점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차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규범적 이해의 단계에까지 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담론상에서나마 이 자체는 큰 진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인권담론은 거의가 주권이 인권에 우선한다는 큰 우산 아래 발전권과 생존권 쪽에 치우치게 강조되고 있는 중국의 대항적 인권담론과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 1989년 천안문 사건 이래 현재까지 간헐적이지만 지속적으로 벌어진 인권담론에서 보여준 이러한 대항적 인권담론은 미국의 패권주의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 이 인권담론은 대외적으로 미국 뿐 아니라 중국내부의 정치 경제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만들어낸 합작품에 다름 아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미국의 패권주의와 강권정치, 인권실행을 빌미로 세계규범의 수용을 강요하는 상황이 빚어질 때마다 중국은 민족주의를 동

원하여 반발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권 자체에 대한 거부로 이어지기도 했다. 강택민 주석은 서양측의 인권 개선 요구에 대해 “우리에게는 한 두 사람의 개인주의적 인권보다 13억 중국인의 공동체가 누릴 인권이 보다 우선한다”고 한 대답에서 이러한 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미국의 가공할 패권주의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중국정부 또한 이러한 미국의 패권주의를 민족주의 강화에 이용하면서 간접적으로 다중적인 인권논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인권논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정부만이 아니다. 여기에는 소비대중, 지식인, 유교담론 등이 합세하고 있다.

중국내의 인권담론은 먼저 경제적 개방과 함께 근대화를 이루어야 하는 현실적 과제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해야 되는 중국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중국정부의 체제유지는 역설적으로 92년 남순강화 이후 계속되는 경제고도성장으로 유지되고 있다. 고도성장 과정에서 소비대중들 역시 고도 성장의 과정에서 자신들도 시장이익으로부터 상당부분 혜택을 입고 있다는 점 때문에 당상층부의 구조적인 부정부패에 눈감아준다. 이런 당상층부와 소비대중간의 은밀한 공범관계는 당의 부패를 지적하기보다는 이용하는 쪽이다.

1999년 코소보 사건 직후 잠시 중국에서 인권과 주권에 관한 논의가 일어났을 때 논자들 거의가 주권이 인권에 앞선다는 논지로 일관했던 사실을 기억해보면 여기에도 지식과 정치의 모호한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불러일으킨다. 물론 현재 중국에서의 정치적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들을 무조건 비난할 수도 없긴 하다.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화 과정에서 불거져나오는 분배의 불공정 문제의 원인을 중국내부의 체제의 구조적 부패에서 구하기보다 지구화와 시장경제, 그리고 국제자본의 착취라는 외부적인 데에서만 구하려는 일부 신좌파 지식인들의 입장은 간접적으로 민중의 권익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로막는다.

또 하나 전향적 인권논의를 소극적으로 방해하는 입장이 있다고 한다면 추상적 수준에서 논의되는 유교담론일 것이다.<sup>1)</sup> 현재 맑스주의가 구호로만 남아 있는 중국에서 일부학자들에 의해 도덕적 이데올로기적 위기의 상태를 문화적 비전으로서의 유교가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주장하는 것에 우리는 예의 주시

1) 여기에서 나는 유교담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 방법을 문제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

해야 한다.<sup>2)</sup>

이들의 문제는 논의성격이 역사와 현실에 내재된 참된 문제와 대면하면서 현실과의 얽힘 속에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닌 최대도덕으로서의 고담준론의 관념적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서구적 근대성에 대해 유교를 대안으로 삼으려는 입장의 유교대안론은 동아시아 권위주의 정부의 인권침해를 간접적으로 호도하는 역할을 한다.

요컨대 대외적으로는 패권주의의 압력, 안으로는 정부측의 근대화의 이데올로기화, 이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소비대중들, 내부의 문제에 눈감는 지식인들, 그리고 유교대안론자들의 교묘한 동거가 직간접적으로 체제적 인권논의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 자체가 폭넓은 인권개념과 실행에 관한 인권논의를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역으로 앞의 이러한 환경이야말로 인권관념의 형성과 인권실행의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객관적 현실이다. 이 환경을 때로는 협조를 이끌어내고 때로는 투쟁해가면서 어떻게 인민 대다수가 다가갈 수 있고 실행가능한 인권 개념을 도출해갈 것인가가 우리의 현실적 고민이다.

이 글은 이러한 현실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중국에서 인권 개념의 가능한 형태는 어떤 것일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려 한다.<sup>3)</sup> 인권개념과 실행의 문제에서 일반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으며 그것이 얼마나 잘 실행되느냐가 지표일 수 있다. 그러나 인권에 관한 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바로 중국이다. 우리는 이 점에서 중국에서 법에 대한 인식이 서양에서 말하는 법개념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도덕화된 제도, 제도화된 도덕<sup>4)</sup>이라는 표현으로 개념화할 수 있듯이 도덕과 법이 완전히

2) Joseph Chan, (1999), 「A Confucian Perspective on Human Rights for Contemporary China」, Edited by Joanne R. Bauer, Daniel A. Bell, "The East Asian Challenge for Human Righ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13쪽 참조

3) 중국의 인권문제에 관련한 인문학쪽의 논문으로는 중국의 인권논쟁의 경과와 주요쟁점 그리고 그것을 동아시아적 상황과 연결시켜 그 논점을 다각도로 짚어보고 있는 논문으로 백영서(2000a)의 「중국 인권문제를 보는 시각」 -- 동아시아적 상황과 관련하여 --(『동아시아의 귀환』, 창작과비평사, 2000)과 중국정부와 유교자본주의론자들이 주장하는 인권개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줄고, 「유교·민족·인권」 -- 중국의 근대성 문제: 개인과 국가를 넘어서(『철학연구』 53집, 2001 여름)이 있다.

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정치적, 시민적 인권보다는 주권, 생존권과 발전권을, 개인적 인권보다는 집체적 권리를 주장하는 중국의 인권담론을 그들의 맥락에 초점을 맞춰 이해하면서 생존권, 발전권의 이행 문제를 거칠게 짚어보고 그 실행에서 딜레마가 존재한다는 점을 간단하게 지적한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주권(집체적 인권-민권)의 강조와 관련하여 그것의 근대적 형성과정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중국적 인권관념의 형성 가능성에 대해 전망한다. 단, 논의의 중심은 후자에 두어진다.

## II

중국정부가 인권 문제를 거론하게 된 것은 역시 89년 천안문 사태 이후이다. 중국정부는 1991년 11월 1일 “인권백서”에서 인권에 대한 기본 입장을 표명했다. 여기서 인권의 중국적 특징으로 당 영도의 견지, 생존권 우선, 권리와 의무의 통일의 원칙, 발전권 중시, 주권 우위를 제시했다. 이것들은 바로 중국 내외로부터의 인권억압의 비판에 대한 반론의 근거가 되고 있다. 특히 주권 우위에 의해 인권은 ‘국내문제’가 되고 ‘국내문제’로서의 인권은 당의 통솔적 지도라고 하는 제한을 받게 된다. 인권 중에서도 ‘개인적 인권’은 생존권 우선, 권리와 의무의 통일원칙, 발전권의 중시에 의해 집단적, 국가적 이익의 하위에 놓이게 된다. 더 나아가 개인적 인권 중에서도 정치적·정신적 인권보다는 생존권에 연결되는 경제적, 사회적 인권이 중시된다. 그리고 잠시 1992년 6월 북경대학에서 개최된 인권문제 토론회에서는 위의 내용이 국제인권 발전의 새로운 추세를 간과하고 투쟁성을 과도하게 노출하여 장기적으로 ‘지도사상상의 정치적 실용주의’로부터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성되기도 했지만 같은 해 10월 등소평의 남순강화 이후 다시 인권은 주권의 범위 안의 문제라는 것, 국제법의 주체는 주권국가라는 것, 인권보호는 내정불간섭을 전제로 한다는 것, 인권은 우선 인민의 생존권과 발전권이라는 것이 다시 천명되었다.<sup>5)</sup>

이상을 간추리면 주권과 더불어 생존권·발전권이 강조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본래 발전권은 인권의 보장을 기초로 하여 보장되는 데 반해 중국에서는 ‘개인인권 보장의 선결

4) 민두기, (1988), [중국의 전통과 현대적 전개], 『중국근대사론 I』, 지식산업사, 152-153쪽 참조

5) 「維護人權尊重主權反對霸權」, 『人民日報』 1992년 10월 18일

조건’으로 주장된다. 또 발전권의 주체 문제에서 기존의 주장이 개인이 발전의 중심적 주체이고 발전권의 적극적 참가자 및 수익자인 반면 중국의 발전권은 주체는 주로 민족·사회·국가와 같은 집단이다. 즉 개인은 발전권의 직접적 주체는 아니고 그 권리의 직접적 수익자일 뿐이다. 한 마디로 “국가의 독립권, 국가의 생존권 및 발전권은 사회주의 중국과 중국인민의 최대의 인권”이라고 보는 것이다.<sup>6)</sup>

위의 인권논의에서 보건대 중국정부는 기본적으로 사회·경제적 권리가 정치적·시민적 권리보다 우선적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에는 정치체제 유지와 경제성장 우선의 논리가 있다. 14억의 인구라는 거대한 중국을 혼란에 빠트리지 않으면서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그들의 특수한 상황을 생각하면 위의 주장을 이해 못할 것도 없다.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려 한다 해도 이들의 발전권 우선 논리의 경제정책에는 문제가 있다. 이들이 현재 취하고 있는 정책은 주지하듯 경제발전을 위해 인권을 유보한다고 하는 노선이다. 이 경우 구체적으로 발전을 위해 평등을 희생해야 한다. 또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실천이 발전을 지연시키거나 파괴하기 때문에 자유를 유예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것들은 정부와 인민대중이 이해관계와 인권문화의 부재로 암묵적으로 양해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인권유보는 사실상 지배집단의 이익유지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 또 인권을 억압한 권위주의 정치 체제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 할 근거도 없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sup>7)</sup>

6) 이러한 정부의 기본입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는 인권 문제가 국제적 대화의 중요한 주제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많은 나라들의 국제적 인권압력에 현실적이면서도 전술적 유연성을 가지고 대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1991-1992년 두차례에 걸쳐 인권 사절단을 서구에 파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국제적 관심에 반응하려는 의도에서 1991년 인권위원회는 먼저 「제1차 인권백서」, 발간에 이어 「형법에 관한 백서」(1992), 「티벳 인권상황」(1992), 「가족계획」(1995), 「제2차 인권백서」(1995), 「아동의 권리」(1996)를 출간하였다. 그러나 여러 종류의 인권백서가 발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탄압은 여러 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상식적으로 알려진 정치적 인권탄압의 사례만 들어보아도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사람들을 수감하거나 자의적으로 구속하는 경우, 그리고 이들의 강제추방, 독립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티벳인, 문화부흥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몽고인, 종교탄압 등을 들 수 있다. 또 공개처형이라든가 강제적 불임과 낙태는 별도로 하더라도 고압적으로 진행되는 인구계획 조치에 의한 여성과 아동의 인권 침해 사례는 국제적 기준과 중국의 법률까지도 위반하고 있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정부가 표명한 바 정부의 선부론을 표명한 이후 개혁개방 20년의 결과는 21세기가 시작된 현재 중국에서 절대 빈곤의 상태를 넘어 빈부의 양극화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는 점이다. 경제적 발전권은 경제 성장에 편승한 극소수 권리이지 중국인 대다수는 이 경제 성장의 혜택에서 벗어나 있다. 이를테면 수많은 중국농민과 시민들은 노동, 교육, 의료보호권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고도 성장의 이면에서는 최소한의 생존권마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빈부격차가 점점 더 격화되어가고 있는 현재와 같은 심각한 상황에서는 개방으로 인한 자본주의 혜택을 입지 못한 다수 중국의 농민과 도시 노동자들은 자본주의적 개방이 실시되어 절대빈곤을 극복하게 해준 자본에 대한 80년대식 사고와는 달리 이미 자본주의적 환상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다. 이런 점에서 대중소비사회와 글로벌리즘의 초보적 학습을 마친 대중과 중국정부와의 이해관계가 언제까지 일치할 수는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좁은 의미의 경제성장 개념을 탈피하여 평등과 사회정의를 포함한 인간개발, 사회개발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 경제 사회발전이 인권보호와 증진에 역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 세계인권 추세도 발전권에 대한 세계적 인식이 확대되면서 인권 실현의 강력한 장애요소인 빈곤타파를 중심과제로 설정하고 지속가능한 인간개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것은 경제성장과 함께 발전권과 생존권이 부딪치는 문제이다. 중국에서 경제고도 성장으로 대규모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인민대중들이 가공할 위험에 항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는 인간의 생명과 안정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간의 인권에 대한 성숙되고 폭넓은 이해 없이는 해결방안을 찾기가 쉽지않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권 문제에서 발전권만의 또는 생존권만의 문제가 발생과 해결과정에서 따로 존재할 수 없고 정치적, 시민적 의식이 함께 해야 한다는 규범적 인식이 곧 현실적 인식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7) 김중섭, (2001), 「21세기의 민주주의와 인권사상」, 『민주주의와 인권』, 2001년 1권 2호, 59쪽

경제권 분야에서 생존권 발전권이 강조된다면 최근 코소보 사태에서도 보여준 바 정치적으로는 주권이 강조된다는 점이 중국의 인권담론의 특징이다. 이때 인권 담론에서도 역시 인권이 주권에 우선한다는 언설이 이구동성으로 배척되었던 일을 기억한다. 중국 근대에는 국가의 주권이 곧 인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제국주의 시대에는 대체로 주권 회복이 시대의 과제였고 그런 면에서 인권은 주권에 종속된 것처럼 비춰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 시대에도 주권과 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인권을 선택해야 생명이 유지될 수 있었다.

일찍이 대약진의 3년과 문화대혁명 시기에 생존권은 조국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식민지 홍콩으로 넘어가서야 보장받을 수 있었다.<sup>8)</sup> 이 때 당정부 지도자조차 인민들이 살아서 홍콩으로 건너간다면 정부도 그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개탄하고 수만인을 중국 주권의 보호하에서부터 이탈시킨 일이 있다. 이 지도자의 심중에도 인권(생존권)은 주권보다 훨씬 큰 일이었다.<sup>9)</sup> 또한 중국공산당 제1회 전대를 개최한 후 당의 동지가 체포되자 상해의 프랑스 조계당국이 동지들을 중국 당국에 인도하는 것을 어떻게든 저지하려고 한 사건이다. 제국주의 통치하의 제국의 인권상황에는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중국당국처럼 무차별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다. 공산당의 동지는 조계에 있는 편이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이었다.<sup>10)</sup>

요컨대 주권과 인권은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주권은 있고 인권은 없는(나치독일 본국의 유대인) 것과 인권은 있고 주권은 없다(97년 이전의 홍콩 시민)고 하는 두 개의 상황 하에서는 후자를 받아들이고 전자로부터 도망하는 것이 어떤 문화에 있어서도 인지상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의 옹호는 하나의 가치로서는 확실히 주권의 옹호에 우월하다. 주권을 옹호하는 투쟁은 인

8) 秦暉, (2000), 「ナショナリズムと中國知識人の國際政治觀」, 『現代思想』 2000. 6, 203쪽  
 9) 秦暉, (2000), 204쪽  
 10) 秦暉, (2000), 204쪽 : 친후이가 민족해방투쟁과 사회주의 건설의 과정에서 주권보다는 인권을 선택했던 과거 중국공산당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것은 그의 인권담론이 현정부의 비위를 거슬리지 않으면서 그들의 인권의식을 유도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한다.



권을 높인다고 하는 목표에 종속되어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에서의 정의를 획득할 수 있다.<sup>11)</sup>

중국의 최근 인권담론은 인도적 관점에서는 물론이지만 근현대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위와 같은 사례와 비교해보더라도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최근의 인권논의를 살펴보면 100년 전 중국이 세계체제에 편입되면서 일어났던 민권논의의 족적을 느낄 수가 있다. 100년 전 전통시기에서 근대시기로 넘어오는 시기 절박한 과제였던 국민국가의 형성과 이 과제에 조응하여 일어났던 민권담론이 국민의 기억 속에 피드백되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현재의 인권담론에 남아 있는지도 모른다. 이에 관한 溝口雄三의 연구가 있다. 그의 연구에 도움받아 우리는 현재의 중국사회 내부에서 진행되는 인권 담론의 특징적 성격이 어디에서 발원하였는가에 대해 그 대강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사회사적, 철학이론적 접근방식을 동시에 구사하고 있는 溝口의 민권사상 연구는 인권개념에 비견될 단체권으로서의 국민권(민권)의 특징에 주목해 그것이 왜 그렇게 결과했는가를 천착해 들어간다. 전근대시기의 유교적 사회 시스템이라는 기존의 전통사회에 내재해 있던 공적 사상의 소인이 서양의 국민주권 사상을 만나 어떻게 민권사상을 형성해갔는가를 살피는 것이다.<sup>12)</sup>

이 연구를 나의 이해에 기초하여 재구성해보면 청말 민권의식의 두 근간은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백인)에 대한 주권의 획득, 대내적으로는 군주전제(私) 대한 인민(公)의 권리 획득, 인민의 이기심(散沙의 자유)의 극복과 공익으로의 전환, 즉 백성에서 국민으로의 전환이라는 데 기초하여 민권의식이 형성된다. 여기서 민권이란 황제 전횡의 억압성을 극복하고 구성원 개개인의 이기성을 극복한 국민권으로서의 단체권이다. 즉 국가의 존망에 책임을 갖는 국민이 되기 위한 권리인 것이다.<sup>13)</sup> 여기서 개인의 자유는 황제를 전횡과 국가에 무관심한 민의 이기성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상징화된다.<sup>14)</sup> 이러한 이기성으로 상징된 것

11) 秦暉,(2000), 204쪽  
 12) 溝口雄三,(1995), 「中國の民權思想」, 「中國の公と私」, 研文出版  
 13) 溝口雄三,(1995), 215-217쪽 참조

들은 야만적 자유 : 부민(양계초), 산사의 자유(손문), 생민, 천민 등으로 불리워질 수 있으며 이것들은 보편적으로 극복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결국 개인권은 국민권에 종속되어버리는 것이다. 여기에 근대시기 국민적 통합의 필요성에 의해 서양의 평등사상이 받아들여져 국민의 주권이라는 관념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근대 시기 서양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민족주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설명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군주의 중국도, 천하인의 중국도 아닌 '중국인의 중국'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가 강조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이 때 민족주의는 생존의 논리이기도 하다. 이런 면에서 국민권은 생존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생민으로부터 국민으로의 전환은 사(개인의 이익)에서 공(집단의 이익)으로의 전환이며 이러한 집단적 국민, 국가의 성립은 그 내부에서 개인의 자유, 평등을 원리로 하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길러낼 수 없었으며 그보다는 그것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향했다고 溝口는 결론 내리고 있다.<sup>15)</sup> 그리고 이러한 공으로서의 국민으로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天民의식과 天下爲公을 기초로 하는 전통사상 속에 있었다고 본다. 이러한 전통적 요소가 사상적 기초로 작용하여 기존의 사회체제를 타도하고 공화제를 수립하고 사회주의를 수립하는 역사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평가한다.<sup>16)</sup>

현재의 상황을 근대시기에 대비시켜 생각해본다면 우선 국민권을 성립시켰던 대외적인 요소로서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제국주의는 사라졌다. 그러나 끊임없이 인권외교를 통해 주권간섭을 하려 하는 미국의 존재는 중국을 긴장하게 만든다. 또한 근대시기의 황제 전횡과 인민의 야만적 자유로 대비될 수 있는 현 정부와 인민의 상태는 어떤가? 모택동의 정권을 이어받은 현정부는 이미 공의

14) 손문은 개인이 각자 자유를 발휘하는 것은 산사의 자유라고 하면서 중국의 인민에게는 자유가 너무 많기 때문에 혁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손문은 여기서 자유 자체를 문제 삼는다고 보다는 국가의식이 없는 자유를 질타하는 것이다(손문, [민권주의] 제2장). 또 여기서 개체의 자유는 공화를 해체하는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陳天華, [論中國宜改創民主政體], {民報} 제1호).  
 15) 溝口雄三,(1995), 226-228쪽 참조  
 16) 溝口雄三,(1993) [중국의 공과 일본의 공],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외국학자초청 특별강연회발표논문

개념은 떠나 있다고 할 수 있다. 부정부패의 구조화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점에서 국가는 사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미 공으로서의 국가가 아니다. 또 소비대중을 포함한 대중은 자본주의적 욕망이 끝없이 분출되고 있고 이런 점에서 더 이상 야만적 자유, 산사의 자유가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분출되는 자본주의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으며 이는 이미 타자성을 결여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국가와 인민은 공익으로서의 국민권의 형성이 요구되었던 근대시기의 조건과 질에서는 다르지만 그 이기성을 자기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근대적 의미에서 주권의 존망위기는 해소되었다고 본다면 문제는 국가와 인민의 공성(민권)을 어떻게 회복하느냐일 것이다. 그리고 이 공성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다시 전횡이나 이기성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방지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것은 역으로 근대과정 속에서 국민권이 왜 자유와 평등을 억압하고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길러낼 수 없었는가에 대한 역추적하는 설명방식을 필요로 한다. 그랬을 때에만 앞으로 중국의 민주주의의 제도화라는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집체적 억압성 즉 중국사회의 '同'이라는 전체시스템으로 상징되는 다수자의 억압성에 이의를 제기한 사상가들이 왜 근대시기에 존재했고 당시 중국사회에서 이들 사상가들의 고민이 상징해주는 것은 무엇이었는가<sup>17)</sup> 그리고 이들의 고민이 역사 속에서 왜 묻혀버릴 수 밖에 없었는가를 검토해야 한다.<sup>18)</sup> 이들의 고민은 집체성적 사회관계에서 알게 모르게 기성권력에 의해 이타적 행

17) 예를 들면 장병린이나 노신, 주작인 등, 이들의 고민을 통해 우리는 중국적 개인의 존재 양태를 엿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은 중국 근대의 특수한 상황에서 개인을 주장하더라도 민족주의 성립의 전제하에서라는 것을 잊지 않았지만 반면, 개인의 내면적 성찰 없는 동일화 문제를 문제삼았고 또 이런 점에서 민족주의와 국가는 영원성으로 표상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들에게서 개인 또는 개인의 주체성이라는 개념은 근대적 성격을 갖지만 그 축은 전통사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18) 이 지적은 구구의 연구가 그렇지 않아도 자신의 역사에 대해 자각적 성찰이 부족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중국의 전체 지식계, 특히 현재 중국사회의 내부 비판에 눈을 감는 중국 지식인의 연구에 자기 합리화의 구실로 종종 이용되기도 한다(대표적으로 제1회 동아시아문화공동체포럼에서 발표된 汪暉의 [신아시아를 상상하는 역사적 조건]을 들 수 있을 것이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다.

위가 규범으로 강제되는 경향 등 전통사회관계의 권위주의적 성격을 어떻게 타파하느냐에 있었다. 따라서 개인(獨)의 비사회성을 의식적으로 강조한다. 이를테면 공동체에서의 주어진 역할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개인의 독자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내발성을 확보하여 규범의 외적 구속력과 긴장관계를 유지하느냐가 이들 고민의 핵심 문제였다(장병린).<sup>19)</sup> 근대시기에 있어서도 개인의 해방 문제에서 나의 자각은 동시에 국가와 민족의 일원으로서의 나의 자각이지만 그것은 미리 위정자에 의해 정향된 국가의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지의 결정에 참여하는 능동자인 것이다(노신).<sup>20)</sup> 그런데 이러한 나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부정과 성찰이 있을 때 가능하다. 이럴 때 사가 사로서 인정되고 그 결집으로서의 건강한 공이 탄생할 수 있는 것이다. [광인일기]에서 인육을 먹는 사람은 악인이나 강자가 아니고 자신과 의견이 다른 사람이며 이들은 상황에 따라서는 이름도 없고 의식도 없는 살인단체로 돌변할 수 있다. 상림수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바로 이들 이름 없는 단체에 의한 타살인 것이다. 이와 같은 同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반성이 없는 한에서 문화대혁명과 같은 비극은 충분히 예고될 수 있는 것이다.

공성 회복의 과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전통사회에 존재했던 공공영역에 비견될 만한 중간단체의 존재와 역할이다.<sup>21)</sup> 청말까지 존재했던 여러 가지 형태의 중간단체는 군벌의 할거와 제국주의의 瓜分의 위기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때문에 중앙에 흡수, 통합되어버렸다. 이후 모택동의 혁명으로 인해 이러한 중간단체들이 전면적인 국가권력의 침투를 받은 후 급기야 자립성을 상실했다고 본다. 이러한 중간단체들이 이제 현재의 시점에서 그 사회가 어떻게 자립성을 회복해갈 것인가가 문제화되고 있다.<sup>22)</sup>

19) 우리는 이를 방법적 개인주의라고 부르면 적절할 것 같다.

20) 전통적으로 인민들에게 정치참여의 권리는 없었고 반역의 권리만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환기하면 이 문제는 더욱 절실해진다.

21) 국내에서 중간단체와 민간사회에 대해 주목할만한 연구로 백영서(2000)의 두 논문, 「중국의 국민국가와 민족문제 : 형성과 변형」과 「중국에 시민사회가 형성되었나? : 역사적 관점에서 본 민간사회의 궤적」(『동아시아의 귀환』, 창작과비평사)이 있다.

22) 더 나아가 溝口는 또 종족이라는 성스러운 공동체가 사실상 국가라는 성스러운 공동체로 변이되었을 뿐이며 모택동이 국가의 부성을 부여받은 성인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공성의 회복은 사회적 공론의 장을 필요로 한다. 공론의 장이 부재한 상태에서 사적인 문제들로 간주되기 쉬운 사회문제들을 공론화하는 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다양한 형태의 중간단체들이 이전의 자립성을 회복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들의 존재는 국가와 공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한편으로는 국가를 꺾박하면서 비판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 인민대중이 참여하고 이들이 다시 의식있는 집단으로 民衆을 되찾는다면 이 자체로 낮은 차원에서의 인권에 대한 논의와 실행을 위한 기본 조건이 조성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지식인도 현재 중국에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할 것이다.

#### IV

인권은 우리의 일상 속에 항상 함께 있다. 의식되지 않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중국문화, 동양문화는 인권과 거리가 멀다고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그것이 제도로서, 말로서 표현되지 않았을 뿐 규범이나 가치로서는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제 문제는 이러한 규범이나 가치를 현실로 끌어와 어떻게 제도화하느냐에 있다. 절차와 제도에 기존의 전통적 가치를 끌어들이면 그만큼 실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규범의 최고치에만 관심을 갖지, 전통 속의 규범과 가치를 낮은 수준의 객관적 기준의 틀 안으로 어떻게 끌어들이야 할까를 고민하지 않는 경우를 본다. 물론 궁극적 최고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좋다. 그러나 때로는 그 최고치(예치)에 현실성(제도)이 개입되지 않을 경우 유토피아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문화대혁명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바로 인치의 극단화였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전통의 긍정적 측면을 계승하는 방법에 대해 다시 고민해야 하며 동시에 인간의 주관적 도덕이 잘못되어갈 경우 이를 금지시킬 정의와 권리의 법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도 신경써야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도덕과 법이 완전히 분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또 극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법과 도덕의 미분화라는 이 현상은 정말

는 점을 지적함과 아울러 이를 통해 예치시스템이 그 형식을 바꾸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한다. 미조구찌 유조 외, (2001), 『중국의 예치시스템』, 청계, 306쪽 참조

활용한다면 이 자체가 민주적인 제도가 확립된 뒤에는 도리어 그 제도를 사상적 측면에서 풍부하게 만들 수 있는 자산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중국적 의미의 근대 적용과 근대 극복의 문제도 게재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인권 문제는 동아시아의 상호연관성이 날로 긴밀해져가고 있는 지금 중국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중국내부의 인권 문제는 곧바로 동아시아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인권 문제를 고민할 때에도 동아시아 다른 나라와의 평등적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진행시킬 필요가 있다. 더구나 통합의 주체는 항상 자기이어야 하는 중국적 보편성의 사고 습관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국의 다수 지식인들을 염두에 두면 우리에게 이 문제는 특히 중요하게 다가온다. 중국은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평등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도덕적 인정을 받을 때만이 그들이 비판해마지않는 패권적 미국에 도덕적 비판의 명분을 세워 그들을 꺾박하고 평화에 동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보면 동아시아적 전망<sup>23)</sup>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게 된다.

동아시아의 평등관계 유지에 중국만의 노력 뿐 아니라 동아시아 다른 나라들과의 노력이 함께 있을 때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동아시아의 (무슨무슨) 공동체를 주제로 한 동아시아 지식인들의 의사소통 모임은 매우 실천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가 취할 것은 미국식의 일방적 참견 방식보다는 비판과 연대를 함께 아우르면서 그들 역사의 특수성을 인정해주는 것이다. 이런 상호인정 속에서 그들의 민족주의도 내부적 차원에서의 민주주의적 민족주의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때서야 비로소 국가에 대해 중국국민이 갖는 자긍심이 내부로 그 방향을 바꾸게 될 것이고 이것이 자체 인민들로 구성된 보다 현대적 개념으로서의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승화될 것이다. 다시 말해 중국이 보다 호의적인 국제환경을 접할 수 있게 된다면 중국에서의 민주화의 전망은 더 밝아진다.<sup>24)</sup>

23) 백영서, (2000a), 296쪽 참조 : 인권 문제에서 동아시아적 전망은 백영서의 언급에서 암시를 받았다. 그가 언급하는 것과 내용에서는 조금 다르지만 문제의식에서는 대동소이한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인권 문제에서도 합의점을 찾아가는 대화적 성격의 담론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마련될 것이고 문화와 철학적 배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담론상의 합의 가능성은 일정한 환경만 조성되면 인권 개념의 합의와 인권의 실행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이다.

24) Yangi Tong, (199), [중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전망 : 이론과 현실], 『5.18심포지움 자료집』 참조

발 제

# 일본의 내쇼널리즘과 인권

-국기/국가 문제를 중심으로

권 혁 태  
(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

## 일본의 내셔널리즘과 인권 -국기/국가 문제를 중심으로

권혁대

(성공회대학교 일본학과)

### 일본의 '우경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메이지 시대를 대표하는 일본의 사상가인 나카에 초민(Nakae Chomin 中江兆民 1847-1901)의 저서 중 <삼취인경륜문답>(Sansuinin keirin monto 三醉人經綸問答)(1887)이라는 책이 있다. 술에 취한 세 사람이 각기 다른 입장에서 메이지 유신 후 근대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19세기 후반의 일본 사회의 진로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책이다. 이 책에는 세 사람의 각기 다른 생각을 지닌 지식인이 등장한다. 이상주의적 평화주의자는 절대적 평화론을 주장하면서 만일 군사력의 완전 철폐로 인한 군사력의 공백을 틈타 외적이 침략해와도 '이쪽이 몸에 조금의 쇠 덩어리도 지니지 않고 한 발의 총알도 지니지 않고 예의 바르게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칼을 휘둘러 바람을 가르면 칼날이 아무리 날카롭다고 해도 바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요. 우리들은 바람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영토가 좁고 인구가 적은 나라의 경우는 '도의'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에 대해 일본 전통의상을 애용하는 국가주의자는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악(惡)의 요소가 있듯이 나라에게도 악의 요소가 있으며 따라서 전쟁이란 피할 수 없는 '나라의 분노'라고 말한다. 나라간의 다툼을 피하는 것은 겉장이일 뿐이며 오히려 전쟁을 통해 나라는 경제적으로도 강성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현실주의적인 합리주의자로 등장하는 다른 한 사람은 외교방침은 평화우호를 원칙으로 하되 무력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언론, 출판 등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점차 완화하고 교육

이나 상공업을 점차로 번성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세 사람의 각기 다른 생각은 19세기 후반기의 일본 사회의 방향을 둘러싼 지식인 사회의 생각을 대변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국가주의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21세기의 벽두에 19세기의 일본의 사상가의 책을 떠올린 것은 나카에의 문제제기가 현재의 일본 사회의 사상적 혼란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메이지 유신부터 1945년 패전까지를 국가주의자의 노선이라 한다면, 1945년부터 현재까지의 노선은 현실주의적인 합리주의자의 노선이다. 그리고 사회당을 비롯한 반전 평화 세력의 생각은 이상주의적 평화주의자의 노선이다. 굳이 이를 일본 사회의 '우경화'에 비유한다면, '우경화'란 국가주의에로의 회귀 혹은 지향을 뜻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회귀 혹은 지향이 왜 지금에 와서 힘을 얻게 되었는가라는 점이다. 물론 1990년대 후반 이후 계속되고 있는 '우경화'의 흐름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학자인 나카무라 마사노리(Nakamura Masanori 中村政則)는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 이후 서구화와 국수화, 국제주의와 민족주의의 사이클이 대략 30년마다 일어났다고 말한다. 19세기 말이 첫 번째 파도이고, 1920년대의 민주주의와 세계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1930년대에 나타나는 군국주의화가 두 번째 파도이며, 미군정에 의해 추진된 민주적 개혁에 대한 반동으로 1950-60년대에 나타난 일부 우익의 국가주의적 주장이 세 번째 파도라면, 1990년대 후반부터 개시된 일본 사회의 우경화는 네 번째 파도라는 것이다. 민족주의와 국제주의를 왔다 갔다 하는 왕복 운동은 일본 근현대에 특유한 운동법칙 같은 것이며 따라서 교과서 왜곡 등의 우경화의 흐름도 장기적인 흐름 속에서 보면 결국은 후퇴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성립할 수 있다.

우경화를 제도적인 차원, 운동적인 차원, 사상적인 차원에서 나누어 볼 때, 과거에도 운동적 및 사상적인 차원에서 우익에 의한 우경화의 시도가 적지 않게 있었다. 문제는 90년대 후반 이후 나타난 우경화 흐름이 과거와는 달리 운동적인 차원이나 사상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제도적인 성과물을 얻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왜곡 교과서의 검정 통과 뿐이 아니다. 이미 1999년에 '주변 사태법'이 제정되어 자위대의 해외활동에 대한 법적 족쇄가 대

폭 완화되어 헌법 9조에 묶여 있던 자위대의 '군대'로서의 기능이 대폭 강화되었다. 이는 일본 전후 사회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인 비무장 평화주의를 무력화시켜 후술하는 바와 같이 명실상부한 헌법 개정을 통한 군사대국화로 연결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또한 같은 해 '국기·국가법'이 제정되어 침략주의와 천황주의의 상징물인 히노마루와 기미가요에 법적 근거가 부여됨으로써 학교 교육 현장에서 '국가주의 교육'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이와 같은 우경화=국가주의의 대두(내셔널리즘의 고양)이라는 사태가 인권 문제와 어떤 지점에서 만나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는가이다.

본고에서는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을 통해 '일본의 내셔널리즘과 인권'이라는 주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하나는 국기/국가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오키나와 문제이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문제를 이어주는 끈은 전쟁에 대한 기억이다.

## 국기/국가 문제란 무엇인가

<장면 1> 한국에도 잘 알려진 일본의 축구 영웅 나카타 히테토시(中田英壽). 현재 이탈리아의 세리아 A에서 활약하고 있는 그의 애칭은 히테. 히테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일화가 있다. 국가대표간 시합개시 전 국가 합창 시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히노마루를 쳐다보면서 기미가요를 조용히 따라 부른 것과는 달리, 그는 언제나 고개를 숙이거나 몸을 움직이면서 입술을 굳게 다무는 등의 동작을 취해 주목을 받았다. 그런 그가 1997년 모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미가요 말입니까? 촌스럽지요. 시합을 하기 전에 부를 노래가 아니지요'라고 발언해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다. 이후 우익단체 등이 축구협회 등에 압력을 행사하고 여론이 악화되자 나카타는 기미가요 합창이 나올 때, 조금씩 입술을 움직이기 시작했고, 스포츠 신문은 '드디어 나타타도 기미가요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특필했다. 이에 반해 단조로운 일본 축구를 화려한 개인기와 조직력으로 끌어올리는데 한 몫을 했다는 라모스 선수. 브라질에서 일본으로 귀화한 그는 일본에 대한 '나라 사랑'에서는 '순수' 일본인을 능가한다고 한다. 특히 그의 히노

마루 사랑은 각별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히노마루. 최고다! 이렇게 아름다운 국기, 없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무릎이 아파도, 히노마루를 달고 있다고 생각하면 힘이 난다. 정말 불가사의. 지금까지 몇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다. 유니폼의 히노마루. 관중석에서 휘날리는 히노마루. 히노마루가 눈에 들어오면, 지금 체념할 수는 없다며 또 다시 투지가 불타오른다. 히노마루를 달고 기미가요를 듣는다. 최고다. 몸이 떨린다. 몸 속에서 힘이 불끈 솟아 오른다. 그렇지만 일본 선수 중에는 그렇지 않은 놈도 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다. 히노마루를 다는 것은 나라를 대표하는 것이다. 뽑힌 선수만이 달 수 있는 것이다. 나라를 대표해서 싸운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그것을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월드컵을 보아라. 모두가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은 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이다. 나라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그런 점부터 이미 지고 있는 것이다. 자신을 위해서라고? 그건 당연한 일이잖아. 그렇다면 왜 좀더 커다란 것을 짊어지려고 하지 않는가?’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태생적인 일본인인 나카타는 히노마루나 기미가요에 대해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는데, 브라질에서 귀화한 귀화 일본인은 히노마루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하다. 스포츠와 국기/국가는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깊다. 특히 국가간 경쟁이 첨예하게 드러나는 축구에서 이 경향은 더욱 현저하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내수형(內需型) 스포츠인 프로야구와 스모가 인기를 누려왔다. 내수형 스포츠에서도 물론 히노마루가 게양되고 기미가요가 불려진다. 그러나 이는 일종의 의식일 뿐이지, 관중석에서 히노마루를 흔들고 기미가요를 열창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일본에서 J리그가 인기를 얻게 되고 일본 축구 실력이 일취월장하고 2002년 한국과 공동으로 월드컵을 개최하게 되자 축구는 대표적인 국가간 시합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이에 따라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는 수출형 스포츠의 상징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즉 축구를 통한 국기/국가가 내셔널리즘과 결합할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진 것이다. 실제로, 역사 교과서 왜곡으로 악명을 떨친 일본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측에서 만들어낸 중학교 ‘公民’ 교과서는 히노마루를 단 축구 선수들의 사진을 많이 게재하고 있다.

<장면 2> 오키나와의 슈퍼 마켓 주인 치바나 쇼이치(知花昌一)씨. 그는 1987년 전국 체전이 열리는 오키나와 현의 소프트볼 경기 개최식에서 스코어보드 위에 있는 국기게양대에 걸려있던 히노마루를 끌어내려 불에 태우는 사건을 일으켰다. 그는 결국 재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그는 말한다. 「일본인은 전쟁에서 히노마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생각해 과거를 청산해야 한다. 그리고 새롭게 국기를 제정해서 다시 히노마루를 국기로 삼는다면 어쩔 수 없다. 그렇지만 국기가 국내용으로 반드시 필요할까? 깃발이라는 것은 식별 표시의 기호이기도 하지만 사상을 표시하기도 한다. 선박이나 대사관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은 식별표시로서 당연한 일이다」

<표1> 히노마루 게양 및 기미가요 제창율  
(%,1984년 졸업식)

	히노마루(국기)			기미가요(국가)		
	초	중	고	초	중	고
東京	93.1	92.4	37.8	69.1	61.7	4.5
廣島	79.7	76.7	31.2	32.7	14.3	1.1
沖繩	6.9	6.8	0	0	0	0
平均	92.5	91.2	81.6	72.8	68.0	53.3

<자료> 「朝日新聞」 1985년9월6일

<장면 3> 99년 2월 28일, 히로시마 현(廣島縣) 교육 위원회는 졸업식에서 ‘히노마루’를 게양하고 ‘기미가요’를 제창하라는 이례적인 직무 명령을 각 학교에 내렸다. 이와 같은 ‘강제’조치에 대해 교직원들은 반대의사를 밝혔다. 교육위원회의 강제명령과 교직원들의 ‘반대’사이에서 갈등하던 현립 세라(世羅) 고등학교 교장(58세)은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다. 관리 능력이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자신이 택할 길은 어디에도 없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을 기회로 정부는 ‘국기/국가법’제정을 서둘러, 결국 1999년 국기/국가법은 제정되었다.

<장면 4> 1998년 3월 9일. 사이타마(埼玉)현립 토코로자와(所澤) 고등학교에서 거행된 졸업식을 졸업생 423명 중 400명이 거부하고 학교의 공식적인 졸업식과는 별도로 졸업기념제를 개최하는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했다. 토코로자와는 전통적으로 학생들의 자주성을 존중하는 학풍으로 알려져 「생도권리장전」 「히노마루 기미가요의 강제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정도가 있을 정도이다. 그런데 당시 새로 부임해온 교장이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졸업식에 갑자기 강제한 것이 파행적인 졸업식의 원인이 되었다.

국기 및 국가에 대한 존경을 이념적 경향과 관계 없이 중요하고도 당연한 덕목으로 받아들여온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감각에서 보면, 역사적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위의 사례에 나타나는 일본 사회의 국기/국가에 대한 거부 반응은 사실 이례적이다. 이는 일본의 국기/국가법 제정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응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강명구 교수는 신문 컬럼에서 히노마루와 기미가요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국기와 국가였다는 사실, 그리고 이를 강제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 있으며, 실제로 반대해왔다는 사실, 그리고 일본 사회에 대한 한국의 무지에 놀라워하면서, 민족주의로 포장된 우리의 국가주의에 주는 교훈은 없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한다<sup>1)</sup>. 또 한겨레 신문은 전통적인 일본관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한다. 국기/국가법의 제정을 정치적/이념적 의미로 해석해 「전후 일본의 사상과 정치분야를 주도한 보수세력의 국가주의와 평화·사상의 자유, 개인의 가치 등을 회구하는 진보·자유주의 세력 사이의 50여 년에 걸친 이념적 패권투쟁에서 국가주의의 승리를 공식화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sup>2)</sup>.

이상과 같은 사례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반대하는 이유와 배경은 무엇일까? 둘째는 오키나와는 일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히노마루 게양

1) 강명구 「기미가요 법제화 논란의 교훈」 『한겨레신문』 1999. 3. 18

2) 「사설·우려되는 일본 '국기·국가법안」 『한겨레신문』 1999. 7. 24. 이와 같은 시각은 임성모의 다음 연구에도 나타난다. 임성모(1999) 「국기·국가법 제정을 통해 본 일본의 내셔널리즘과 역사교육」 『동아시아역사연구』 6(1999.12).

을, 기미가요 제창을, 치바나 쇼이치의 히노마루 소각 사건 등에서 다른 지역과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왜일까? 라는 점이다.

첫 번째 이유는 히노마루와 기미가요가 전쟁과 침략의 상징물이며, 따라서 전쟁과 침략으로부터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일본과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이를 법제화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연구자인 미와 다카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것들(히노마루와 기미가요)은 일본 국가의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민중 억압과 불가분의 국가 표상으로서 민중 동원과 억압에 사용되어 왔다는 과거를 갖는다. 물론 이 깃발과 노래의 탄생은 피로 물든 근대 일본 국가 시대보다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민중에게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란 무엇보다도 1920년대 후반 이후의 천황제와 군국주의의 국가의례로 철두철미하게 사용됨으로써 비로서 정착되어, 국기/국가라는 인식을 강제주입시킨 깃발과 노래에 다름 아니다. 민중에 정착되어 있다고 하는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는 침략과 식민지 지배의 국가 표상으로 정착되었으며 그리고 그런 깃발과 노래로서 기능하였던 것이다. 히노마루 기미가요의 이런 과거를 무시하고 미적 기능만을 집어내서 그 가치를 평가할 수는 없다」<sup>3)</sup>

두 번째 이유는 기미가요나 히노마루의 가사/음율/디자인 등이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한 적이 없으며 또한 따라서 나라의 성격이나 구조를 적절히 표현하는 대표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인 작곡에 독일인 편곡인 노래에 '천황의 시대가 천년 만년 영원히, 조그만 자갈이 바위가 되고 이끼가 될 때까지'라는 고금화가집(古今和歌集)을 담은 기미가요, 그리고 민속 신앙에서 만들어진 문양을 메이지 시대에 외국의 요구에 따라 선박의 국적 표시로 사용한 것이 계기가 되어 현재에 이르른 히노마루 모두, 혁명의 이념인 자유/평등/박애라는 근대적 보편이념을 담은 프랑스의 삼색기, 13주에서 시작해서 50주로 확대되는 건국의 경위를 담은 미국의 성조기, 그리고 서로 다른 전통을 가진 지역의 연방을 나타내는 독일의 삼색기나 영국의 유니온 잭와는 달리 일본이라

3) 三輪隆(1999) 「戦争責任・憲法原則から法制化を考える」 『法と民主主義』 340號、1999年7月.



는 나라의 이념, 건국의 경위, 나라의 구조 등을 대표하거나 표현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sup>4)</sup>.

그런데 이상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반대한다면, 만일 사회적 합의를 거쳐 평화와 인권의 상징으로 새롭게 국기/국가를 만들어 이를 법률로 제정하고 각 학교에 이를 강제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문제가 남는다. 따라서 당연히 세 번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일반론으로 국기/국가법의 제정과 이에 따른 '강제'가 시민의 종교적/양심적 자유에 위배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즉 국기 및 국가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으나 이것이 법제화되어 강제성을 가질 경우는 개인의 종교적/정치적/양심적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견해에 설 경우, 히노마루나 기미가요가 가지고 있는 침략성과 봉건성이라는 어두운 과거의 그림자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형태의 국기/국가의 법제화에 반대하는 것이 된다. 실제로 야마즈미는 국기/국가를 폐지하거나 혹은 단순한 식별용 기호로만 사용할 것을 주장하면서 올림픽에서의 다음과 같은 실험을 예로 든다.

「1980년, 미국 정부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략에 대한 저항과 비판의 뜻을 담아서 모스크바 올림픽 참가를 중지했다.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어 IOC는 '올림픽은 개인의 경기이며, 국가 또는 지역 간의 경쟁이 아니다'라는 올림픽 본래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서 현장에서 국기/국가 글자를 삭제하고 1984년 대회로부터 선수는 각국 올림픽 위원회의 노래와 깃발을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 결정을 환영한 '아사히(朝日)신문'의 사설(1980년 2월 13일)은 올림픽을 대비한 국비에 의한 연습이나 체육시설의 확충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 아마추어 정신에 설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을 던지고 국기/국가 없이 정열에 가득찬 올림픽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이다'고 매듭짓고 있다. 이 IOC결정이 그 대로 실현되었다면 올림픽

4) 宮臺眞司 「「情の論理」を捨て、「眞の論理」を構築せよ」(宮臺외편 『戦争論 妄想論』 教育史料出版會)28-29쪽 참조

은 크게 변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실현되기 커녕, 국가간의 경쟁은 점점 더 강해져 80년 IOC결정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조차 적어도 일본에는 거의 없는 것이 실정이다. IOC 결정 직전, 나카노 요시오(中野好夫)는 '올림픽과 국기/국가'(1980년 2월 9일 집필, '마이니치(毎日)신문' 2월 16일)에서 다음과 같이 통렬하게 말하고 있다. '정치가 관련되는 한, 올림픽 이상의 실현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명예를 양 어깨에 짊어진다는 따위의 억지는 이제 싫다. 그런 것이 없어도 경기 분위기는 충분히 고양된다. 아니 오히려 자연스럽게 신선하게 되지 않을까? 거꾸로 말하자면 국기, 국가가 개입하는 한, 앞으로도 정치 관련의 어려운 문제들이 속출하는 것이 뻔히 보인다.'

나카노는 1956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세계탁구선수권 대회가 열렸을 때, 우승자를 위해 국기게양도 하지 않고 국가 제창도 없었던 것을 목격했다. 그 후 영화감독이면서 국제탁구연맹회장이었던 몬타규와 만났을 때, 몬타규는 '마치 당연한 사실처럼, 스포츠에 국기, 국가가 왜 필요한가라는 한마디로 대답했다'고 대답했다. 가와모토 사부로(川本三郎)는 '월드컵과 애국심'(마이니치신문, 1990.7.15)에서 '스탠드에는 각국의 국기가 펄럭이고 대회장인 이탈리아에는 나라를 단위로 해서 응원단이 온다. 스포츠가 내셔널리즘, 애국심의 경쟁장이 된다. 이 점에서는 월드컵은 역시 별로 기분이 좋은 대회는 아니다'고 말한다. 가와모토씨는 기분은 별로 좋지 않지만 아무리 국기를 휘둘러도 공 한 개를 둘러싼 시합이니 전쟁보다는 낫다라고 하면서, EC통합의 일정이 잡히고 경제변에서 국경이 없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 대해 '국가 단위의 생각은 과거의 것으로 되어 가고 있다. 속좁고 관대하지도 않은 내셔널리즘은 통용되지 않게 된다'고 말한다. 히노마루 게양, 기미가요 제창의 의무화 정책과 내셔널리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치학자인 아베씨는 '국민적 상징과의 정서적 일체화만을 강조하는 결과를 빚어, 내셔널리즘의 비합리화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해 내셔널리즘은 보편적인 현상이고, 어느 나라도 국기, 국가에 많은 경의를 표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반론이 나온다. 이를 예상해서 아베씨는 국민적 통합이 초미의 급무인 신흥국은 별도로 하면, 내셔널리즘은 무조건

적으로 찬미할 만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는 대답을 준지해둔다. 그리고 내쇼널리즘의 비합리성이라는 관점에 서면, 어느 나라이든지 국가 및 국기의 강조는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며, '만일 젊은 세대에게 내쇼널리즘을 주입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우선 무엇보다도 국민적 연대의 이상을 열심히 주장하여야 한다. 그 위에서 제 국민의 협조, 다른 말로 하면 인터내쇼널리즘의 중요성을 주장함으로써 내쇼널리즘을 상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sup>5)</sup>.

### 미국의 예- 버넷 판결

국기 강제화와 시민적 자유와의 관계를 시사해주는 좋은 예를 미국의 예에서 찾아보기로 하자. 첫째는 1934년 6월 14일에 내려진 미국 연방최고 재판소에서 내려진 버넷 판결이다. 제2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보다 강한 미국주의, 국민통합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웨스턴 버지니아주의회는 법령을 제정해, 공립학교 정규 과정의 일부로 합중국 국기에 대해 오른 손을 올려 경례하고 이와 함께 충성을 서약할 것을 교원과 학생들에게 의무로 부과했다. 이 의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불복종 행위로 간주하여 학생이 퇴학 등의 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 부모도 처벌을 받게 되어 있었다. 종교단체를 신앙하는 버넷 일가는 신앙상의 이유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를 요구해 이 법령이 적용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재판소에 요구하였다. 3명의 하급심 재판관이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한 결정에 대해, 교육위원회는 연방최고재판소에 상고하였다. 잭슨 판사가 법정(다수)의견을 내놓았는데, 이 의견은 국기경례의 헌법상의 의미를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서약의 말과 관련해 표현의 한 형태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상징주의는 사상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원초적이지만 효과적인 방법이다.' '운동체, 국가, 정당, 결사, 교회 등이 구성원의 충성심을 깃발이나 일정한 색깔, 문양에 연결시키려는 것이다.' '국가의 상징은, 종교적 상징이 신학적 사상을 전달하는 것처럼 정치사상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징과 대응하는 것이, 이들을 수용하

5) 山住正己 『學校と日の丸・君が代』(岩波ブックレット) 49-55쪽.

고 혹은 경의를 표현하는 데 적절한 몸동작이다. 즉, 경례, 인사, 탈모, 무릅꿇기 등이다.' '국기 경례와 선서를 강제하는 것은 특정의 신조와 심적 태도를 확신시킨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버넷 사건은) 국가 상징에 대한 수용 내지 경의를 요구하는 것은 사상 및 표현의 자유에 저촉되는 문제이다는 것을 날카롭게 제기하는 것이다.(사상 및 표현의 자유와 국가 권력과의 관계에 대해서) '공권력 당국이 설득과 실례를 통해 촉진하려고 하는 국민 통합이라는 목적이 문제인 것은 아니다. 문제는 현재 채택하고 있는 강제가 목적 달성을 위해 헌법상에서 허용될 수 있는 수단인가의 문제이다.' '반대의견을 강제적으로 배제하기 시작하면 반대자를 근절하려는 것으로 연결된다. 의견의 통일 강제하는 것은 동일화를 초래할 뿐이다',

두 번째 예는 존슨 사건이다. 1984년 미국텍사스 주에서 열린 미 공화당 대회에서 레이건 미 대통령의 방위정책을 비판하는 젊은이가 성조기를 태워버리는 사건이 있었다. 그 젊은이는 텍사스 주법에 의해 금고, 벌금 형을 받았지만 제소하여 1989년 6월 최고재판 결과, 승소했다. 최고재판소는 '정치적 의견 표명 수단으로서 국기를 불태우는 것은 합중국 헌법 수정 1조에서 보장된 권리이다'고 하는 고등재판 판결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부쉬대통령 등 공화당 간부는 헌법 수정의 필요를 주장했지만 헌법 수정을 반대하는 민주당은 국기 파괴 행위를 범죄로 하는 연방법의 제정을 서둘러, 10월에 이를 성립시켰다. 1990년 6월, 최고재판소는 5대 4의 근소한 차로 이 연방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수 의견이 부레넌 판사는 '국기 모독에 사회가 반발한다 해도 당인을 처벌하는 것은 미국국기를 국기이기 때문에 숭상하여야 하는 자유 그 자체를 약화시킨다'고 말하고 있다. 이 판결에 대하여 '아사히신문' 논설위원실 담당의 '창'(窓)(6월14일자)은 '많은 미국민은 국가의 명예와 성조기는 분리할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중략)헌법의 제일 목적이 '통치'보다도 '인권 보장'에 있다고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쓰고 있다. 이어서 6월 21일 하원에서는 미국 국기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연방 의회와 각주는 합중국국기에 대한 물리적 모독을 금지하는 권한을 가진다'는 헌법 개정 결의안에 대해 투표를 행하였으나, 찬성 254, 반대 177. 찬성이 과반수를 넘었지만 개정에 필요한 2/3에 30

표가 모자라 결의안은 부결되었고, 이어서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하원에서는 투표에 앞서 미국국기는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미국의 가치를 상징하는 '특별한 존재'이고 의도적으로 모독하는 행위를 헌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찬성파와, '국기를 사랑하고 존경한다. 그러나 국기에 경례하고 싶지는 않다'고 하는 반대파 사이에 5시간에 걸친 토론이 있었다. (중략)(기자는) '국기 모독을 벌줄 것인가, 아니면 표현의 자유를 지킬 것인가'는 기사에서 '의석을 잃을 위험을 범하는 것보다 신념을 굽혀서 타협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 내셔널리즘과 인권은 어떻게 충돌하는가?

<표3> 세계 주요국의 국기/국가법의 실정

미국	국기는 독립선언 1년후인 1777년 6월 14일 국기법으로 명기. 국가는 1931년 법률로 명기.
영국	국기는 1801년 칙어. 국가는 관행.
프랑스	국기 및 국가는 모두 헌법 2조에서 국가 상징으로 규정.
러시아	국기/국가 모두 대통령령.
캐나다	국기는 1965년, 국가는 1980년에 법제화.
독일	국기는 협법규정. 국가는 1952년 대통령과 수상의 서간 교환으로 규정.
호주	국기는 국기법으로, 국가는 1984년에 국민투표로 선별, 연방총감이 선언.
이탈리아	국기는 헌법으로, 국가는 국무회의 결정.
중국	국기는 헌법 명기. 국가는 전국인민대표자회의 결정.
한국	태극기는 1948년. 국가는 관행으로 정착.

<http://www.cc.matsuyama-u.ac.jp/~tamura/hinomaru.htm>

이와 같은 국기국가법의 제정이 반드시 국기국가의 강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않더라도 법적 근거가 없었을 때에도 강제성 여부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마찰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법제화는 실질적 강제화에 근거를 마련해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표3>에서 보는 것처럼 국기/국가 모두에게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준 나라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에 일본 사회의

우경화와 관련해서 히노마루 기미가요의 강제는 일층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자유권의 후퇴라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국기 국가의 법제화가 다른 기본적 인권의 후퇴로 작용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점에 있다. 기본적 인권이라는 개념은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국가권력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달성되는 자유권적 인권이 중심을 이루었으며, 이 자유권적 인권에는 인간의 존엄, 생명 신체의 안전, 사상·신앙·언론·집회·결사의 자유, 이 등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재산권의 보호 등에 참정권을 포함한 개념이다.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권적 인권 개념이 기본적 인권의 틀안에 포함되기에 이르른다. 일본이 기본적 인권이 헌법의 틀안에서 보장되기에 이른 것은 전후 민주주의의 골격을 이룬 비무장 평화헌법 체제하에서였으며, 1889년에 제정된 대일본제국 헌법 하에서는 일견 입헌주의적 성격을 지니면서도 '신민(臣民)'이라는 틀에 갇혀 근대적 인권 보장이라는 점에서는 제한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sup>6)</sup>. 따라서 최근 일본 사회에서 불고 있는 내셔널리즘=국가주의=우경화의 바람이 전후 평화 헌법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평화 헌법 체제하의 전후 민주주의체제가 달성한 인권의 개념도 동시에 부정된다는 것을 뜻한다.

최근 고바야시 요시노리가 전후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달성한 인권적 가치를 현대 일본 사회의 병폐를 만들어낸 뿌리로 진단하고 전시기 혹은 일본의 전통시대의 개인=가족=국가라는 등식하에서 개인을 국가의 부속물로 격하시키고 국권을 인권의 절대적 상위개념으로 두는 등, 만화를 통한 대중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내셔널리즘과 인권이 어느 지점에서 충돌하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다<sup>7)</sup>. 일본 사회의 최근 변화는 전후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발전/확장시켜온 기본적 인권이 심각하게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6) 대일본제국 헌법과 평화헌법의 인권 개념의 비교 변화 특징 등에 대해서는 杉浦泰雄(1992) 『人權の歴史』 岩波書店, 제9장을 참조.  
7) 이상에 대해서는 권혁태(2001) 「교과서문제를 통해본 일본사회의 내면읽기」 『역사비평』 (2001년 여름) 역사비평사. 또 고바야시 요시노리에 대해서는 『戰爭論』 1 및 『戰爭論』 2, 『「個と公」論』 (幻冬社)를 참조. 이에 비판으로는 宮中眞司·姜尙中의 (1999) 『戰爭論 妄想論』 教育史料出版會 혹은 上杉聰(2000) 『脱戰爭論』 東方出版.

것이다<sup>8)</sup>. 따라서 재일한국/조선인을 비롯한 정주외국인, 외국인 노동자, 여성, 장애인, 피차별 부락민, 귀국자녀 등 사회적 소수자가 전후 민주주의체제 하에서 획득해온 한정된 인권이 내쇼날리즘의 고양에 의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대표적 마이노리티 사회의 변화와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마이노리티 사회의 문화적 독자성을 인정하고 이를 보호/육성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에 대한 차별을 조장함으로써 주류 사회에 동화/편입시키는 것에 의해 마이노리티 사회의 해체를 추진해왔다고 할 수 있다. 즉, 인종적, 문화적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sup>9)</sup>. 이와 같은 동화 정책은 피차별 부락민에 대해서도, 아이누족에 대해서도 오키나와 주민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추진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일본의 마이노리티 사회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자연 붕괴' 상태에 가깝게 와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실로 진행되는 '자연 붕괴'상태에 대해 일본의 많은 활동가와 지식인들이 추진해온 '다민족/다문화 국가로서의 일본'이라는 구도는 사실 속수무책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불고 있는 내쇼날리즘의 고양은 이와 같은 가능성마저도 한꺼번에 무너뜨렸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8) 인권에 대한 '반동'은 특히 최근에 현저해졌다. 예를 들어 비교적 중립적인 평론가인 코하마는 장애인/피차별 부락민/차별어 등에 대해 종래와는 다른 논쟁적인 해석을 내놓고 있다(小浜逸郎(1999) 『「弱者」とはだれか』 PHP親書). 또 전통적인 여성상을 옹호하면서 사회적 약자 혹은 소수자로서의 여성문제를 부정하는, 다시 말하면 일본의 전통 가치를 부정하고 여성의 '가족'이라는 굴레로부터의 자립을 서구적 가치의 일본 강제라는 도식으로 푸는 역사 교과서 왜곡의 주역인 다카하시 시로의 논설도 대표적인 예이다(高橋史郎「ファロスを矯めて國立たず」 『諸君』 2002. 6).

9) 1995년 국제연합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가맹하면서 침묵으로 일관한 암묵적 '단일민족론'을 방기하고 아이누족을 홋카이도 지방의 선주민으로 인정하는 등과 같은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는 있었다. 그러나 그밖의 마이노리티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기초를 유지하고 있다.

발 제

## 한국의 월드컵과 인권

### -월드컵, 서포터즈문화, 인권의 정치

이 동 연

(문화평론가·서강대 강사)

## 한국의 월드컵과 인권

### -월드컵, 서포터즈문화, 인권의 정치

이 동 연

(문화평론가·서강대 강사)

#### 1. 월드컵이 말하지 않는 것

월드컵 개막을 4일 앞둔 지난 5월 27일 영상미디어센터에서는 월드컵 공식 공인구 '피버노바'를 제작하는 '아디다스'사를 포함한 스포츠용품 다국적 기업의 아동노동착취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홍콩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AMRC와 '국제민주연대'가 중심이 되어 결성한 <노동자·아동노동착취 월드컵후원 초국적 기업반대 공동행동>이 주최하였는데, 참석자들은 회견에서 "아시아에서는 아동들이 축구공 제작에 착취당하고 있으며 아시아에 있는 한국기업의 노동자들은 노동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월드컵후원기업들은 노동착취를 즉각 중단, 스포츠뿐만 아니라 노동 현장에서도 진정한 페어플레이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sup>1)</sup>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도와 파키스탄은 다국적 스포츠기업들의 각종 축구용품들을 하청제작하는 생산거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파키스탄은 전세계 축구공 생산의 70%를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파키스탄은 35만명의 축구제조업 노동인구와 4천억원의 수출액을 달성하고 있고, 그 중 시알코트 지역에만 연간 3500만개의 축구공을 생산하고 있다.<sup>2)</sup>

1) 『한겨레신문』, 2002 5월 27일자 참고

2) 김선형, 「축구공 만드는 아이들」, 『사람이 사람에게』, 국제민주연대기관지, 2002 3-4월, 23쪽 참고.

문제는 축구공을 비롯해 축구용품을 만드는 파키스탄의 노동인구 중에는 5세에서 10대 중반에 이르는 10만여명의 아동들이 있다는 점이다. 이 아이들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공 하나에 150원을 받고 하루 12시간 이상을 일한다. 강도 높은 수작업 노동으로 인해 어린아이들은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고 심할 경우에는 손의 지문이 없어지거나 허리디스크, 시력상실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국제 노동 인권단체들은 월드컵 개막 1년전인, 2001년 5월 31일에 <아동노동반대 세계행진>(Global March Against the Child Labour)을 결성하여 축구산업에 동원되는 아동의 노동을 금지시키는 운동을 전세계적으로 펼쳐나갔다. 이미 세계축구연맹 “피파”(FIFA)는 <국제 자유노동연맹>과 함께 피파공인 축구용품에 대한 노동조건의 기준을 명시했는데, 대략 그 내용을 살펴보면 “축구공 생산과 관련된 노동이 강요적, 구속적이지 않아야 하고 아동노동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고용에서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등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sup>3)</sup> 그러나 여전히 아동들의 노동착취는 여전히 자행되고 있으며, “아디아스사”나 “피파” 모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한 개에 4만 5천원에 팔리는 2002 한일 월드컵 피버노바 수제 축구공은 공 하나에 15원씩 받는 파키스탄 아동들의 고사리 손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이는 차라리 노동착취이기라기보다는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신체학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 사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피버노바 축구공은 제 3세계 아동들에 대한 노동착취, 인권착취를 발판으로 한일 월드컵 불을타고 전세계적으로 수백만 개가 팔려나가고 있다.

잔뜩 물먹은 스폰지처럼 월드컵의 신드롬은 세상의 모든 사건들을 “공기 속으로 사라지게” 하는지 모르겠다. 48년만에 월드컵 첫 승의 전국민적 감격이 “빨강계” 달아올랐던 폴란드 전의 늘뜩 여운이 남아있던 6일, 미군이 관리하던 고압선에 감전된 건설노동자 전동록씨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전씨는 작년 7월에 고압선에 감전된 후 청력 잃고 양팔을 절단하고 투병중에 사망했는데, 온통 월드컵 소식만을 전했던 이날의 방송과 언론은 전씨의 사망소식을 거의 보도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매스컴은 다음 상대인 미국전을 위한 전력분석과 경

3) 김선형, 같은 글, 25쪽.

기전망을 시간대별로 전달하고, 오는 6월 10일에 있을 경기를 보기 위해 거리로 몰려나온 시민들이 경기결과에 따라 반미시위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우려적인 보도를 곁들였다. 그러나 감전사한 전동록씨에 대한 보도가 자칫, 시민들의 반미감정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했는지, 모든 사건을 죄다 미국전에 열결시키려는 “보도국 제작진”들의 뛰어난 상상력이 이 사건에 만큼은 애써 무시하려 한 듯하다. 전동록씨의 죽음이 행여나 그 삶의 고통에 값하는 조문조차 없이, 에둘러 반미시위의 구성요소로 사용되어서도 안되겠지만, 어쨌든 정치적 효과 때문이지 모르겠지만, 사건 자체의 무관심은 월드컵이 대중들에게 자행할지도 모르는 망각효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따져 보아야 한다. 만일 그것이 월드컵이 대중에게 행사하는 “표상의 이데올로기”라면 “인간의 인권과 신체에 관련된 사건” 역시 이로 인해 선택적이고 배타적인 왜곡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4월 7일 서울시는 월드컵과 관련하여 노점상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버스정류소의 경우 안내 표지판을 기준으로 전·후방 각각 3m, 11m 안에 노점이 들어설 수 없다. 또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6m, 횡단보도, 육교, 택시승차대 등은 주변 5m, 공중전화부스와 분전함 등 공공시설의 3m 안의 노점은 철거한다. 이 원칙에 따라 철거될 노점은 4300여개로, 시는 이 가운데 250여개를 10일까지 시범정비한 뒤 나머지 4천여개는 다음 달까지 정비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sup>4)</sup> 88 서울올림픽 때 시내 노점상들 뿐 아니라, 동네 노점삼까지 싸슬이 철거당한 것에 비해,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지만, <전국노점상연합회>의 주장대로 전체 노점상의 70%를 철거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층노동자들의 생존권에 대한 탄압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 국제규모의 스포츠행사가 열리면 늘 한번쯤 겪는 홍역으로 여길 수 있지만, 지난번 프랑스의 월드컵때의 도심환경정책이나 공동개최국인 일본의 정책과는 다르게 현 정부와 서울시의 도시환경정책은 출발부터 기층노동자들을 배제시키는 정책으로 일관한다.

4) 『한겨레신문』, 2002년 4월7일자 참고.

이 정도 되면, 월드컵은 우리에게 비극적인 축제일지 모른다. 월드컵은 아동 인권탄압의 주범이자, 민중의 생존권 파괴자, 인간 삶의 존엄성을 개무시하는 잡놈으로 여길만하다. 당연히 진보적인 지식인들은 한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을 보이콧하는 운동의 전선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48년만의 감격의 첫 승이니, 역사적인 날이라느니 호들갑을 떨면서 전국민을 국가주의 이데올로기 프로젝트에 동원시키는 매스컴의 “부흥회”가 여간 못마땅할지도 모른다. 단 한 경기 승리에 매스컴이 이성과 자제력을 잃고 대규모 보도 물량투입을 감행할 정도인데, 만일 2승, 16강, 8강까지 올라가는 것을 상상해보면 그 끔찍한 보도 전쟁을 보느니 서둘러 짐을 싸고 외국으로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문제는 월드컵의 숨겨진 사건들이 은폐되어 있고, 민중생존권이 위협 받는 현실이 외면당하는 사실을 뻔이 알면서도 적어도 나같은 축구매니아에게는 월드컵이 주는 매력, 대중적 쾌락의 시소게임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이 존재한다. 사실 진보적 지식인들의 축구에 대한 취향이 제각각이어서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겠지만, 지난번 폴란드전 승리 이후에 대중들이 보인 집단적 반응에 대해 신선한 느낌을 받은 비판적 지식인들이 있을 것이다. 아마 누군가가 앞서 설명했던 이유 때문에 월드컵 보이콧 운동에 동참하자는 요청을 나에게 한다면, 나는 아마 거절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에게 월드컵은 중요한 축제 중의 하나이고, 대중들이 월드컵을 소비하는 실천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차라리 나는 피파개혁운동을 포함해 월드컵이 자행하는 인간에 대한 물이해를 고발하면서도, 대중과 시민 안에서 월드컵을 최대한 즐길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해보는 것을 선택하겠다.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이중적인 의미에서의 “저항과 개입”의 전략이 필요하며, 오늘 내가 말하고자 하는 “월드컵과 인권의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있다. 개인적인 생각에 “월드컵과 인권”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은 이중적인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인권의 문제는 개인의 삶의 가치와 권리가 침해당한 것에 대한 극복의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신체의 쾌락, 감정의 폭발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인권의 정치는 그럼 점에서 자유와 평등의 억압에 대한 극복의 정치이면서, 동시에 본래의 자유와 평

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치이기도 하다. 아동노동착취, 민중생존권위협이라는 월드컵이 야기시킨 모순들이 극복된다해도, 그 실천으로 완전히 환원불가능한 축구를 통한 자유와 평등의 축제는 우리들의 소중한 자산일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입닥치고 축구를 먼저 보는 것으로부터 출발해보자.

## 2. 제발 입닥치고 축구나 봐

1892년에 창단하여, 70-80년대 유럽 축구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시절을 보냈고, 지금도 영국 축구 명가의 계보를 잇는 “리버풀”에는 열혈 서포터즈 “더 콕”(The Kop)이 있다. 1973년과 76년 UEFA컵 우승, 1977, 78, 81, 84년 챔피언스컵 4회 우승 등 무적의 “리버풀”이 전성가도를 달리는 동안 “더 콕”의 감동적이고 잔인한 응원엔 경기장에 또 하나의 불거리를 제공했다. “더 콕”은 리버풀 지역 출신의 너무나 유명한 밴드 “비틀즈”의 노래들을 경기장에서 집단적으로 따라 부르면서, 60년대 새로운 형태의 서포터즈 문화를 주도했다. 그 당시 “더 콕”이 부르던 노래가 비틀즈의 “She Loves You”, “You’ll never walk alone” 등이었는데, “You’ll never walk alone”은 지금 리버풀 서포터즈의 공식 응원가로 경기장에서 애창되고 있는 중이다.

원래 “더 콕”은 서포터즈들이 경기장 앞대 뒤에 서서 집단적으로 응원을 할 수 있도록 의자를 놓지 않고 입석으로 마련한 공간을 의미하기도 했는데, 비극적이게도 1986년 벨기에 헤이셀에서 있었던 챔피언스컵 결승전(맨체스터 유나이티드 VS 유벤투스)의 참사와 3년 뒤 힐스버루에서 있었던 영국 FA컵 준결승(리버풀 VS 노팅햄 포리스트)의 참사로 인해 “더 콕”의 공간은 언론의 지탄을 받으며 소멸되고 말았다. 86년 양팀 서포터즈의 극렬 싸움으로 경기장 벽이 붕괴되어 39명이 숨지고 454명이 부상당했으며, 89년 사건에는 두 서포터즈들의 충돌로 95명이 죽고 170명이 부상당했다. 이 두 사건으로 영국축구협회는 서포터즈의 광적인 응원공간이었던 “더 콕”을 폐쇄시키고, 이후 모든 응원에 사용되는 장비의 반입금지와 앉은 채로의 응원만을 허용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프로축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화려한 휘장과 불꽃놀이는 없어도 “리버풀”

을 위시한 영국 클럽 서포터즈들의 응원도 가장 원초적이고 집단적 광기를 연출하기에 안성마춤이다. “더 콕”의 신화가 아니어도, 레알 마드리드의 서포터즈나, AC 밀란의 서포터즈나, 브라질 “상파울로”의 서포터즈나, 터키의 “칼라타사라이”의 서포터즈들에게 경기장에서의 응원은 카니발이고 인생열전의 회열을 느끼게 하는 퍼포먼스이다.

영국 국가대표 서포터즈에 “92 Club”이 있다면, 독일에 “Groundhopper”, 일본에 “울트라 니폰”, 중국에 “치우미”가 있고, 한국에는 “붉은 악마”가 있다. 월드컵 개막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붉은 악마의 응원은 경기장 만이 아니라 광화문에서 스튜디오에서 커다란 바람몰이를 하고 있다. “손 짹 펴고, 박수 5번, 대한민국”, “오 필승 코리아, 오 오 레오 레”를 외치는 SK Telecom의 한석규와 붉은 악마 회원들의 홍보전을 보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가프로젝트형 서포터즈 응원의 이상함을 느낀다.

지난 5월에 있었던 컨페더레이션스 컵을 계기로 “붉은 악마” 운영진들은 모두가 붉은 악마가 되자는 “Be the Reds”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최근 월드컵 열기가 고조되고, 한국 선수들의 잇단 선전으로 2-3만명에 불과했던 붉은 악마 회원들은 현재 14만명으로 늘어났다. 한국 평가전이 있는 날이면, 경기장 뿐 아니라 광화문과 종로 대학로와 같은 도심거리에는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무리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제 “붉은 악마 찾기”는 생활의 발견이 된 셈이다.

모두가 붉은 악마가 되자는 캠페인은 축구에 대한 조건없는 열정, 이벤트로서의 월드컵을 넘어서는 일상 속에서의 카니발을 만들어보자는 뜻일 것이다. 이는 모두가 국가대표 서포터지가 되자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지역 축구클럽의 서포터즈가 되자는 의미이기도 하다. 브라질 FA컵 결승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란의 응원전, 이탈리아 전통의 라이벌전 ‘AC 밀란’과 ‘인터 밀란’, ‘AS로마’와 ‘라치오’와의 경기에서 볼 수 있는 화려한 응원 스펙타클들은 월드컵이 끝난 한국의 경기장에서는 과연 실현가능한 것일까? 어느 외신의 지적대로 한국인들은 유독 국가대표 경기에만 목을 매고 있지만, 정작 자국 프로리그에는 무관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붉은 악마 신드롬은 토

대가 취약한 한국 축구환경에서 과잉되게 드러나는 하나의 검증받지 못한 거품 현상이고, 국가와 자본이 만들어낸 환상일지도 모른다.

SK Telecom의 한석규 광고가 과연 한국축구의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순수한 응원 필름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알다시피, SK Telecom은 이번 2002년 한일월드컵 경기에 공식 스폰서로 지명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가 경쟁업체인 KT에게 스폰서를 빼앗기고, 절치부심해서 대안으로 삼은 것이 바로 ‘붉은 악마’의 지원을 통한 간접광고 효과였다. 이 과정에서 KT 역시 SK Telecom의 기세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자사 홍보를 위한 응원단을 급조하기에 이르른 것이다.

미디어의 응원열기 역시 그 속내는 다른 곳에 있다. 공중파 3개 방송사는 방송권료로 FIFA에 대략 850억 정도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팀이 만일 16강 진출에 실패하면, 약 300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며, 16강 전에 오를 경우는 반반, 8강에 오를 경우는 대박을 예상하고 있다. 방송사마다 월드컵 총력체제로 전환하면서 시청을 경쟁에서 선점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각 방송사마다 쇼오락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예인들에게 국가대표유니폼을 입히고, 되지도 않는 허접한 응원을 따라하게 만드는 이 어설픈 총력체제가 사실은 사활을 건 자본의 싸움이다. 이 과정에서 붉은 악마의 응원 구호들과 스타일은 또 한번 미디어자본 축적의 구성요소가 된다.

몇칠 전 개신교의 한 목사는 “붉은 악마” 서포터즈가 경기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경기장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한다. 그분에게 붉은 악마 서포터즈는 ‘사탄의 자식’쯤으로 생각되는 모양이다. 일부 보수적인 종교계에서는 진작부터 “Be the Reds”라는 캠페인을 기독교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받아들여 이 운동의 해산과 ‘붉은 악마’의 해체를 주장했다. 이들은 붉은 악마 서포터즈에 대항하기 위해 ‘백의 천사’라는 응원단을 만들어 소위 평화와 겸양을 자랑한다는 ‘백의민족’이란 이데올로기적 유산을 종교적 대항담론으로 전유하고 있다. 이들은 붉은 악마라는 언어 자체가 축구 국가대표의 공식 서포터즈가 되기에는 부적절하며,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심어주고, 한국적 전통성을 찾기가 어려우며, 전체주의적 과격한 행동이 영국의 홀리건을 연상케하여 축구문



화의 순수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한다. 백의 천사를 옹호하는 일부 종교계는 급기야는 ‘붉은 악마’ 퇴출을 위한 특별기도회를 갖는가 하면, ‘붉은 악마’의 이름을 ‘붉은 호랑이’로 명칭을 바꿀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붉은 악마 서포터즈는 예의 레드컴플렉스와 종교적 악마주의의 구설수에 오르며, 보수 종교계로부터 특이한 “이지메”를 당하고 있는 중이다.

서구에서 서포터즈의 역사도 종교적, 지역적, 경제적, 인종적 대립 속에서 형성된 것은 사실이다. 서포터즈는 그 자체로 결코 순수할 수 없으며, 축구만의 진정성으로 모두 환원되지도 않는다. 60-70년대 영국 축구장은 노동자계급의 파업투쟁의 연장이었고,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우와 켈틱의 경기는 구교와 신교의 싸움의 장이었다.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는 뿌리깊은 지역주의의 과별의식을 그대로 재현한다. 그러나 그러한 대립은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서포터즈문화 안에 녹아들어갔고, 그래서 서포터즈와 관련된 비극적인 사건을 넘어서 물리적 마찰의 심화보다는 수만 관중들의 자발적인 카니발을 형성하는 차이의 문화를 만들어 내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지금 붉은 악마 서포터즈의 파급효과는 뭔가 불길하고 꿀꿀하다. 월드컵 끝나면 서포터즈는 다시 경기장과 미디어의 “뺨스걸”들에게 압도당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미디어와 재벌 기업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다. “제발 입닥치고 축구나 봐”

### 3. 붉은 악마와 인권의 정치

작년 월드컵 전초전이었던 컨페더레이션스컵 대회에서 붉은 악마 운영진들은 “모두가 붉은 악마가 되자”(Be the Reds)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붉은 악마의 고립된 응원방식에서 벗어나 누구나 대표팀을 응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 것이 캠페인의 주 목적이다. 붉은악마는 그 이후 붉은 색 티셔츠를 축구팬들에게 나눠주며, 전국민적인 캠페인을 벌였고, 폴란드와의 개막전에서 확인했듯이 이제 모든 국민들은 붉은 악마가 되어 환호하고 있다. 이제 붉은 악마 특유의 “대한민국” 다섯박자 응원과 “오 필승 코리아” 응원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국민응원구호가 되었고, 점핑과 머플러돌리기, 위협적인 체

스추어들은 특정 매니아들만의 기호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행동이 되고 말았다. 폴란드와의 개막전을 보기 위해 광화문과 대학로 등을 점거해버린, 52만명 축구팬들의 열정적인 에너지들은 서구 축구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경우이다. 6월 10일에 있는 미국전에는 이 보다 많은 붉은 악마 응원물결이 도심 공간을 점거한다고 한다.

그러나 “Be the Reds”라는 캠페인은 한국의 축구환경의 충분한 고려없이 서포터즈문화를 너무 일반화하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때로는 이들의 순수한 열정이 애국주의와 국민동원체제에 의해 호명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결국 “Be the Reds”라는 캠페인은 또다른 파시즘적 생산하는 지배이데올로기의 구성요소로 전락되든지 아니면, 축구에 대한 전폭적이고 순수한 열정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갈림길에 있다. 폴란드전과 미국전을 향한 시민들의 전폭적인 열정이 모두 좋게 보이지만은 않은 것이 이 때문이다. 사실 붉은 악마가 외치고 있는 “대한민국”이나, 응원에 행사되는 국기, 태극문양, 국가대표유니폼은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이데올로기 장치이면서 동시에 탈민족주의화된 하나의 스타일이고 쾌락의 기호이기도 하다. 젊은 붉은 악마 회원들은 국기와 국가대표 유니폼에 대한 선입관이 기성세대보다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으로 폴란드전의 열광이 애국주의와 민족주의의 호명이라기 보다는 그동안 억눌렀던, 혹은 이렇다할만한 자생적 카니발이 없던 것에 대한 대중들의 폭발력의 예증으로 볼 수 있다. 인권의 정치가 자유와 평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면, 이러한 자생적인 카니발적 분출로서의 서포터즈문화는 인권의 새로운 생체정치를 생산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붉은 악마 서포터즈의 문화정치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자.

나는 인권과 생체정치를 위해 서포터즈 문화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다. 1) 서포터즈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2) 붉은 악마 서포터즈의 특성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3) 서포터즈의 문화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

1) 축구 서포터즈는 특정한 축구팀을 응원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보통 응원단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과거의 수동적인 의미에서의 응원단이란 용어와 구별하기 위해 영어 표기대로 서포터즈로 명명된다. 축구가 현대화되면서 경기장에서 서포터즈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서포터즈로 통칭되는 관중의 문화는 별도의 볼거리를 제공해준다. 그래서 보통 서포터즈를 12번째의 선수로 명명하기도 한다.

서포터즈는 단순히 자신이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는 박수부대가 아니라 경기장에서 특정한 스타일을 표현하는 하나의 문화주체로 등장한다. 가령 각 나라마다 자신의 지역프로팀이나 자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서포터즈의 스타일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서포터즈의 응원 형태는 크게 응원가와 구호, 그리고 휘장, 깃발, 엠블렘, 머플러 등 각종 응원도구로 구성된다. 응원가는 주로 록음악과 클래식음악에 기초하고 있으며, 구호는 응원가에 맞춰 후렴구로 자국과 지역구단의 정체성을 알리는 내용들로 구성되고, 각종 응원도구들은 민족-국가를 상징하는 이미지들로 채워진다. 서포터들의 응원방식의 특이성은 그 표현형식에 있어 각자마다 서로 차이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집단적 정체성과 인간의 원초적 본능에서 비롯된다. 이는 축구라는 스포츠가 가지는 특이성과 잘 부합된다. 90분 동안 쉬지 않고 일사분란하게 노래와 구호를 외치고, 일치된 체스추어와 점핑동작을 통해 서포터들은 무의식적으로 일체된 호흡을 느끼며, 마치 원시전투시에 급박하게 진행되는 속도와 충돌의 긴박감을 체화하듯 인간 본연의 감정의 상승효과를 즐긴다.

서포터즈의 응원 스타일은 독특한 문화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서포터즈는 경기장이나 밖에서 축구를 좋아하고 응원하는 사람 일반으로 정의되기보다는 특정한 목적의식을 갖고, 조직적으로 응원에 참석하는 집단으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유니폼을 같이 착용하고, 정기적으로 축구 응원을 위해 경기장을 찾고, 특정한 응원방식을 유도하거나 따라하는 좀 더 특별한 응원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것은 일종의 문화적 구별짓기를 통한 집단의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집단적 결속력이 시각적으로 세를 과시하려는 필요에 의해 형성되며, 정도가 심하게 될

경우에는 상대편 서포터즈와의 물리적 충돌을 야기시킨다.

서포터즈는 특정한 스타일의 공유와 약속된 장소에서의 활동이 없이는 사실상 개인적으로 행동하기가 어려운 집단성을 가지고 있다. 서포터즈와 서포터즈 아닌 것을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구별하기가 대단히 어렵지만, 실제 경기장에서 그것을 구별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처럼 조직적인 서포터즈들과 단순경기관람자가 확연하게 구별되는 경우에는 더 그렇다. 모든 관중들이 적극적으로 응원에 참여하는 유럽이나 남미의 경우도 서포터즈들과 아닌 사람들 사이의 구분이 존재한다. 이는 서포터즈는 특정한 문화자본을 생산하고 있으며, 특정한 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2) 한국 축구 역사에서 붉은 악마의 출현은 바로 이러한 서포터즈의 구별짓기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만들었다. 80년대 초반 아시아 최초로 프로축구가 개막되었어도 한국의 응원문화는 아마추어적인 방식을 넘어서질 못했다. 응원은 항상 축구공을 따라가면서 감정의 극심한 차이를 드러냈고, 자생적인 집단적인 열정들을 분출하지 못했다. 이른바 “뺨스걸”과 “아리랑목동”으로 대변되는 계몽주의적 응원방식, 불특정한 다수의 축구팬들을 상대로 한 결집되지 않은 응원전은 서구식 서포터즈 문화의 카니발적인 요소들은 별로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90년대 들어 유럽 프로축구의 소개와 프로축구를 꾸준하게 응원했던 팬들의 증가로 새로운 서포터즈 문화에 대한 욕구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이러한 욕구는 젊은 축구매니아들에게 전달되어 서구식 서포터즈 조직이 탄생했다. 국내 최초의 서구식 서포터즈 그룹을 만들었던 유공 코끼리 서포터즈와 가장 많은 젊은 팬들을 확보한 수원 삼성 블루윙즈의 서포터즈가 한국 서포터즈 문화를 낳는 산파역할을 했다. 붉은 악마는 이러한 프로축구 서포터즈가 모여서 만든 조직으로 95년에 출범했다. 이들은 근 2년 동안 알게 모르게 국가대표팀의 경기를 응원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노하우를 경험하게 되었고, 지속적인 응원효과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공식 응원대뷔전이라 할 수 있는 97년 8월 10일에 있었던 브라질 대표팀과의 친선경기를 시작으로 8월 30일 중국대표와의

친선경기에서 성공적인 응원문화를 주도했고, 98프랑스 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전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대중들에게 확인시켰다. 붉은 악마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국가대표 경기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스탠드를 붉게 물들인다.

‘붉은 악마’의 응원방식이 과거 한국축구의 응원방식과 다른 점이 있다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지 않나 싶다. 첫째 그들은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기 위해서 국가대표 유니폼을 같이 입고 동일한 색깔의 깃발과 로고를 제작해서 조직적인 일체감을 이룬다는 점과 둘째 기존에 연예인의 주도하에 대중가요나 사물놀이에 맞춰 움직이던 수동식 응원에서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응원을 유도하는 점이고, 셋째 인공적인 음향시설을 최대한 자제하고 대신 쉬지 않은 노래와 구호, 그리고 일체된 체스쉴어와 점핑동작을 통해 지속적이고 자연스럽게 체계적인 응원 시스템을 선보인다는 점이다. 또한 이들은 축구공이나 선수들의 동작에 개의치 않고 응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쉬지 않고 응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어떤 결정적인 골찬스 때나 잠깐 흥분하기보다는 상황의 변화에 구속받지 않고 응원 그 자체에 몰입하는 집단적인 응원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의 독자적인 공연이자 행위 예술인 것이다.<sup>5)</sup>

혹자는 붉은 악마 서포터즈 문화가 일본의 ‘울트라니폰’이나 유럽의 서포터즈를 모방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그 형성과정에는 다른 점이 존재한다. 먼저 가장 큰 차이점은 붉은 악마나 프로축구 서포터즈가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활성화되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서포터즈 회원들은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가입신청을 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연대감을 지속시킨다. 한국에서 가장 큰 서포터즈 조직을 자랑하는 수원 삼성 불르윙즈 서포터즈는 대부분 인터넷을 즐겨 사용하는 10대들과 20대들이 주를 이룬다. 둘째로, 서포터즈의 연령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붉은 악마 서포터즈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10대와 20대들로 구성된다. 그 중 10대들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유럽의 서포터즈의 평균 연령이 30대인 점을 감안하면, 구성원 조직에 있어 분명 다른 차이를 보여준다. 한국 서포터즈들의 연령이 낮은 이유는 아무래

5) 이동연 외, 『스포츠, 어떻게 읽을 것인가』, 삼인, 1998, 245쪽 참고.

도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서포터즈 문화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서포터즈 문화가 기성세대 일반이 수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세대들의 문화취향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서포터즈 문화는 정치 경제적인 갈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유럽의 서포터즈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신세대들의 문화매니아적 취향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축구 서포터즈는 가령 영화나 음악을 좋아하는 문화매니아의 한 형태이다. 여기에 90년대 후반부터 이동국, 고종수, 안정환과 같은 신세대 스타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젊은 세대들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했다.

사실 일반 축구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붉은 악마’는 어느날 갑자기 등장한 것은 아니다. 이 그룹은 프로축구 각 구단을 응원하는 팬클럽을 그 전신으로 하고 있고, 한국 축구문화의 선진화를 바라는 동호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발의해서 95년에 조직되었다. 그야말로 서구의 축구경기장에서나 볼 수 있었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응원의 함성을 잠실벌에서도 볼 수 있게 된 셈인데, 이러한 새로운 응원방식의 출현에는 나름의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맥락이 존재한다.

3) 서포터즈 문화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문화적 취향이지만, 특정한 팀과 국가를 광적으로 응원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정치적 반향을 일으키기도 한다. 일례로 작년에 성남을 연고지로 하고 있는 일화가 종교적인 이유로 기독교인들로부터 거센 퇴출압력을 받았다. 이유는 통일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화축구단을 성남에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급기야는 성남시장이 성남경기장 사용을 불허했고, 시즌 중에 다른 구장에서 경기를 치뤄야 했다. 성남 서포터즈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여 축구팬들과 성남시민들을 상대로 일화 축구단 살리기 운동을 펼쳤고, 결국 성남 일화팀을 고수하게 되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프랑스에서도 일어났다. 지난 3월 27일 프랑스와 스코틀랜드와의 평가전에서 4-0으로 이기고 있는 후반 13분, 뉴칼레도니아 출신 카랑뵈가 교체멤버로 출전하자 일부 극우파 관중들이 그를 야유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유인 즉은 카랑뵈가 방송 인터뷰에서 “나는 프랑스인이라기보다는 뉴칼레도니아인”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극우파 국민전선을 이끌고 있는 르펜이 프

랑스 국가를 노래하지 않는 자는 프랑스 대표가 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제 3 세계 이민자 정책을 비판하는 극우파들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경기 직 후 르메르 감독은 일부 관중들의 야유는 프랑스의 모든 대표 선수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이들의 행위를 강하게 비난했다. 서포터즈문화는 이렇듯 경기장 밖에서 축구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운동과 자연스럽게 연계되기도 하며, 경기장 안에서 정치적 지역적 갈등의 연장되는 사태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한국에서 서포터즈 문화의 출현은 새로운 형태의 응원문화의 출현만을 지시하지 않는다. 그것은 축구를 통해 일상의 문화를 형성하는 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문화를 스스로 조직하는 주체들의 변화를 지시한다.

#### 4. 맺는 말

앞서 언급했던 아동들의 노동착취와, 민중생존권위협,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외면, 그리고 피파의 독점적 시스템에 대한 비판과 개입은 인권의 정치를 위해서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조직과 연대가 필요하고, 이는 월드컵이 끝난 후에도 계속되어야 한다. 비판적 운동과 함께 월드컵이란 쾌락의 카니발도 존속되어야 한다. 월드컵과 대중들의 열정에 대한 상관관계는 인권의 정치를 새롭게 사고하도록 만든다. 인권의 정치는 아동들의 노동착취가 근절되고, 민중생존권의위협이 해결되고, 피파의 독점적 시스템이 해체되도 그 본연의 감성의 정치는 해결될 수 없다고 본다. 인권의 정치는 인권의 침해와 모순에 맞서 투쟁하는 정치이기도 하지만, 개인의 쾌락과 열정을 위한 생체정치이기도 하다.

지난 5월초에 있었던 '맨체스터유나이티드'와 '레버쿠젠'의 챔피언스리그 4강 전 첫 경기는 시종 밀고 밀리는 경기 끝에 2대 2로 비기고 말았다. 홈팀인 맨체스터유나이티드가 한 골을 넣으면 레버쿠젠이 한골을 만회하는 식의 박빙의 경기였다. 나는 이 경기를 지켜보면서 축구를 응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집단적인 연대와 공동체의식을 심어주는 지를 다시 실감했다. 알다시피 영국 프로리

그의 응원도 앞서 언급했던 80년대 참사 때문에 응원도구를 이용한 과격한 행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영국서포터와 관중들은 90분 내내 박수와 구호 노래로 일관하며 경기장에 홈팀의 승리를 기원하는 열정을 그치지 않았다. 영국서포터즈는 이탈리아나, 스페인, 독일 서포터즈처럼 화려하지 않고, 단순과격해 보이지만, 그 나름대로의 진지한 열정이 숨어있다.

유럽축구 서포터즈는 전통적으로 국가대표보다는 자신이 좋아하는 클럽팀을 더 열광적으로 응원한다. 이들은 월드컵보다는 유럽클럽의 최강자를 가늠하는 경기에 더 열광한다. 월드컵 경기는 4년에 한번 열리지만, 클럽경기는 시즌동안 내내 열리기 때문이다. 최근 막바지에 이른 유럽 프로리그 최종 라운드과 '우에파컵'과 '챔피언스리그' 경기장에서 발견되는 서포터즈와 관중들의 경기장에서의 환호와 열정은 바로 월드컵 '이후', 혹은 '너머' 축구응원문화의 진실을 보여준다.

불행하게도 같은 시각에 아디다스컵 준결승전에 열린 한국의 경기장은 쓸쓸하기 이를 데 없다. 일부 서포터즈만 힘에 부치는 응원을 하고 있을 뿐 도무지 경기장은 선수들과 관중들이 하나가 되는 축제의 분위기를 연출할 수 없었다. 혹자는 선수들의 경기력 수준을 거론하며 경기장에 가도 싶지 않다거나, 막상 경기장에 가도 흥이 나지 않는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기력은 경기장에서의 열정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다. 오히려 열정적인 응원과 수많은 관중들의 함성이 경기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월드컵을 불과 20여일 남겨두고 '붉은 악마' 바람이 마스크에서 다시 불고 있다. 월드컵은 한국 서포터즈 문화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점을 몰고 올 사건이 될지 모른다. 모든 국민이 붉은 악마가 되자는 슬로건은 월드컵 경기 이후 프로리그 경기장으로 확대되어, 유럽 프로리그 못지않은 카니발의 응원문화가 현실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붉은 악마 신드롬은 아직도 일반 대중들에게는 국가대표 경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붉은 악마 서포터즈는 이미 자신이 좋아하는 클럽팀의 서포터즈이며, 힘들지만 매주 경기장에 나가 아낌없는 응원을 펼친다. 사실 붉은 악마가 바라는 것도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한국의 응원문화가 국대대표 경기에 쏠리지 말고, 국내 프로축구의 활성화를

위해 확산되는 것이다. 그러니 월드컵 한국경기가 있는 날에 경기장을 온통 붉게 물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계속 있게 될 국내 프로축구 경기에서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는 시민들의 열정이다. 서포터즈문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며, 특정한 경기만을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경기 자체를 즐기는 카니발의 문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토론

<월드컵, 서포터즈문화, 인권의 정치>  
에 대한 토론

정준영  
(동덕여대 교수)

## <월드컵, 서포터즈문화, 인권의 정치> 에 대한 토론

정 준 영  
(동덕여대 교수)

이 글은 '인권의 정치'가 두 가지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보면서 서포터즈 문화가 그 첫 번째 의미 즉 자유와 평등의 억압에 대한 극복의 정치가 될 수는 없더라도 두 번째 의미 즉 본래의 자유와 평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개인의 쾌락과 열정을 위한 생체정치'이다. 서포터즈들을 그저 정신없는 '오빠부대'의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서포터즈 문화가 지닌 문화적, 정치적 잠재력을 밝혀 낸 것은 이 글의 큰 공헌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여전히 남는다.

먼저 서구의 서포터즈들은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강한 뿌리를 지니고 있다. 이는 서구 서포터즈 문화가 자발성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포터즈 문화가 카니발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런 자발성의 기초 덕분일 것이다. 반면 우리 서포터즈들은 이런 기반을 대부분 결여하고 있다. 이는 지역연고제가 뿌리박지 못한 우리 프로축구의 현실과도 연관이 있으며 프로축구팀이 대기업의 홍보실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잠재적인 축구팬의 수가 엄청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팀의 경기에만 관중이 몰리는 현상도 이런 현실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자발성에 기초한 카니발의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가? 오히려 저자도 인정하듯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가프로젝트형 서포터즈 응원'만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저자가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듯한 '축구만의 진정성', '축구에 대한 전폭적이고 순수한 열정'은 과연 가능한 것이며 또 바람직한 것인가? 현대 조직 스포츠는 관료화와 상업화로 인해 자발성을 담기에는 부족한 그릇이라는 평가가 많이 있다. 만일 그렇다면 '순수한' 서포터즈 문화는 '제발 입 닥치고 축구나 봐'라는 호소에 결코 호응하지 않을 상업화된 스포츠에 이용당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도 '개인의 쾌락과 열정을 위한 생체정치'가 가능하다면 그 길은 어떤 것인가? 남들이 그걸 어떻게 이용해 먹든지 나는 그 자리에서 카니발을 즐기면 된다는 식의 주장은 지나치게 '순수한' 것이 아닌가?

게다가 적어도 우리나라의 서포터즈 문화는 그 자체가 상업주의의 도움을 강하게 받은 것이기도 하다. 매스컴이 '입 닥치고 축구나' 보아도 과연 지금처럼 서포터즈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었을까? 최근 '붉은 악마'의 상업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로 '붉은 악마'는 상업주의와 은밀한 공모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그 경우에도 여전히 순수한 생체 정치를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

덧붙여서 최근에는 서포터즈를 순치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펼쳐지고 있기도 하다. 영국의 경우 홀리건에 대한 대처의 일환으로 경기장을 좌석제로 바꾸면서 서포터즈 내부의 구성이 크게 바뀌었으며 '붉은 악마'에 대해서도 질서외식을 강조하는 신문기사 등을 통해 서포터즈 문화를 체제내화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생체정치'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가능한가? 말하자면 질서정연한 카니발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형용모순이 아닌가?

첫 번째 의미의 인권의 정치가 여전히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포터즈 문화는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을까? 그들도 그냥 입닥치고 축구나 보아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서포터즈 문화와 이들이 연결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 저자가 인용하는, 성남 일화 살리기 운동과 같은 형식의 운동은 축구 내부에만 국한되어야 하는 것일까? '경기장 밖에서 축구문화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운동과 자연스럽게 연계되기도 하며, 경기장 안에서 정치적 지역적 갈등의 연장되는 사

태들을 경험하게 된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갈등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은 우리 서포터즈 문화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

생체정치는 첫 번째 의미의 인권이 어느 정도 정착된 사회에서 제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보다 본질적이고 급진적인 의미의 인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반면 우리처럼 기본 인권조차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는 사회에서도 이런 생체정치에 대한 논의가 바람직한 것인가? 오히려 중산층적 지향을 지닌 생체정치에 대한 강조가 첫 번째 의미의 인권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돌리는 데 악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은 이 글의 구성에서도 어느 정도 기인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저자는 대기업이나 매스컴을 겨냥해 '입 닥치고 축구나 봐'라고 꾸짖고 있지만 앞 부분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실제 그것이 겨냥하고 있는 대상은 월드컵이라는 축제를 앞에 두고도 첫 번째 의미의 인권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훈계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이다.

발 제

2008년 북경 올림픽과 인권  
- 인권문제의 국제화와 중국의 대응 -

이 남 주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 2008년 북경 올림픽과 인권

### - 인권문제의 국제화와 중국의 대응 -

이 남 주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 1. 올림픽 운동의 정치화, 상업화 그리고 인권

1988년 서울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린 지 꼭 20년이 되는 2008년 다시 아시아의 북경이 하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었다. 올림픽의 규모를 회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으며 스포츠 영역에서 차지하는 영향력도 크게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이와 함께 올림픽 운동의 현실은 올림픽운동이 내세우고 있는 정신과 점차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증가하여 왔다. 즉 냉전시기에는 이념과 체제 경쟁의 수단으로, 냉전이 해체된 이후에는 상업화와 국가주의의 새로운 결합으로 올림픽 운동은 스포츠를 통한 세계인의 교류와 화합이라는 지향은 위협을 받아 왔다.

올림픽은 국가가 아니라 도시가 주최하는 것이라는 원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라는 행위자를 제외하고는 올림픽 운동의 변화를 이해하기가 힘들다. 특히 80년대 초반의 소위 신냉전 시기에는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과 1984년 LA 올림픽이 반쪽 올림픽이 되며 올림픽이 국가 사이의 경쟁에 희생되는 선례를 남겼다. 그리고 1988년 서울올림픽은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후 12만에 처음으로 대부분의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의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성공적인 올림픽이라고 평가받기도 하였지만, 광주에서의 민간인 학살과 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신군부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도구로서 올림픽이 이용되었다는 혐의를 지우기 힘들다. 90년대 초 소련 및 동구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에 따른 냉전의 해체로 이념과 체제경쟁의 장으로서의 의미는 약화되었지

만 그렇다고 올림픽이 순수한 스포츠행사로 변한 것은 아니다. 즉 올림픽은 체제경쟁의 폭발성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올림픽의 상업화와 국가주의의 새로운 결합을 통해 돌파구를 찾기 시작하였다. 1992년 스페인월드컵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던 경기는 미국의 NBA 스타들이 총출동한 농구 경기였다. 1989년만 해도 조심스럽게 이루어지던 프로선수들의 올림픽 참여는 1992년 스페인 월드컵을 계기로 새로운 장을 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총메달 수나 금메달 수에서는 여전히 소련의 체육전통을 계승한 독립국가연합이 1위를 차지하였으나 NBA 선수들이 주축이 된 미국 농구대표팀은 다른 국가들을 하프스코어로 압도하면서 냉전해체 이후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미국의 힘을 과시하는 상징으로 등장하였다. 이는 이미 올림픽이 순수 아마추어리즘에 의해 지탱되기는 어려우며, 국가주의와 상업화에 의한 폭발력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물론 새로운 가치를 도입하여 올림픽 운동의 정신을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2000년 시드니 올림픽은 “그린 앤 그린 (Green and Green)”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환경이라는 가치를 올림픽에 도입하였다. 시드니올림픽은 올림픽관련 시설의 건설에서 재료, 위치 등 모든 면에서 환경친화적인 정신을 구체화시켰다. 이후 올림픽에도 환경은 항상 중요한 이슈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올림픽 운동에서 인권이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인권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지만 그 동안 올림픽 운동에서 인권 문제는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1993년과 2000년 북경이 올림픽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인권 문제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제기되었다. 현재 국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로 등장하고 있는 환경보호 혹은 인권의 발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이는 올림픽 운동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새로운 가치가 올림픽 운동의 정신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올림픽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은 경기장 주변의 변화에만 제한되고 있다. 그리고 북경 올림픽의 유치과정에서 인권 문제가 부각된 것은 정치 투쟁의 수단으로 활용된 결과이기도 하다. 다만 원인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2008년의 북경올림픽이 다른 어떤

올림픽보다 인권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관심이 표출되는 올림픽이 될 가능성이 높다.

## 2. 중국의 올림픽 유치과정:

### 민족주의적 열망과 인권상황에 대한 비판

중국과 올림픽의 관계는 그 시작부터 매우 짙은 정치적 색채를 띠고 있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처음 열린 1952년 헬싱키올림픽 때는 중국의 참가 자격을 두고 IOC에서 논란 때문에 주최국은 올림픽 개막식을 불과 일 앞두고 중국을 초청하였다. 중국은 사실상 올림픽 참가가 불가능한 상태였지만 신생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하여 참가를 결정하였고 구성된 중국대표단은 올림픽이 시작된 지 일찌 헬싱키에 도착할 수 있었고 경기에는 수영 시합에만 한 선수가 참여했을 뿐이다. 이후에는 내부적으로는 문화대혁명 등의 혼란과 외부적으로는 올림픽의 대표권에 대한 국제올림픽위원회와의 의견대립으로 중국은 올림픽 참가하지 않았다.<sup>1)</sup> 중국의 올림픽 참여는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결정하고, 1979년 12월에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중국올림픽 위원회에 중국 대표권을 부여하고 대만은 중국타이베이의 명의로만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는 미국의 보이콧 주장에 중국이 따르면서 참가가 무산되었으나 1984년 LA 올림픽에는 사상 처음으로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하였다.

중국은 세계스포츠 무대에 복귀함과 동시에 아시안게임, 올림픽게임 유치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1990년 7월 북경 아시안게임을 위한 시설을 시찰하던 덩샤오핑(鄧小平)은 중국도 올림픽 유치를 하자는 의견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물론 이는 예상밖의 결정은 아니었다. 개혁개방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1)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체육계도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특권적 지위를 누리고 반인민적인 사업을 작풍으로 일관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한 대자보는 허룡(賀龍) 등 체육부분을 주관하던 당지도부를 “그 동안 체육은 농민, 노동자, 병사를 위한 것도, 6억 인민대중의 건강이라는 대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선수로, 시합에서의 승리, 기록의 돌파, 우승패의 쟁취에만 몰두하였다”고 비판하였다.(談放·趙無眠, 1996, p.337)

발전 모델을 주목하던 중국이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올림픽에 주목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따라서 1990년 북경 아시안게임 이후의 다음 목표는 자연스럽게 올림픽 유치에 되었다. 특히 중국의 올림픽 유치는 당시 천안문 사태로 인한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천안문 사태 이후 서방국가들간의 관계가 악화되고 중국의 인권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중국의 올림픽 유치는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여러 인권 NGO들이 중국의 인권문제를 들어 북경올림픽에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국 하원의 인권소위원회는 북경올림픽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일부 서방 국가들이 사실상 북경올림픽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특히 1993년 2월 출범한 클린턴 행정부는 부시행정부의 대중국외교를 비판하고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었다. 1993년 몬테카를로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중국은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나 과반수에 미달하여 진행된 재투표에서 불과 두 표 차이로 시드니에 2000년 올림픽 개최권을 빼앗겼다. 북경의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았던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이 실패를 서방 세계 특히 미국의 부당한 간섭에 의한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1993년 12월에는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시도도 좌절되었다. 이 두 사건은 중국인들에게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가 중국의 입장을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즉 중국에서 올림픽 유치의 실패는 스포츠 영역에서의 경쟁에서 진 것이 아니라 상 처받은 민족자존을 상징하였고 90년대 중반에 중국에서 민족주의적 경향이 강화되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Fewsmith, 2001a, p.130)

90년대 중반부터 중국의 개혁개방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미국과의 관계도 다시 정상화되면서 중국의 올림픽 유치에 대한 정치적 장애는 크게 줄어들었다. 외부에서는 중국이 언제 다시 올림픽 유치를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인가에 관심을 보였지만 올림픽 유치가 또 다시 실패할 경우 국민들이 받을 정서적 타격과 중국 정부의 위신 추락을 우려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에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였다. 그런데 가장 유력한 경쟁자로 여기고 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2006년 월드컵 유치에 주력할 것을 결정하면서 북경의 기회는 더욱 커졌다. 북경시는 1998년 11월 25일 2008년 올림픽 유치신청을 할 것임을 선언

하고 1999년 4월 7일 IOC에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2000년 8월에 IOC는 10여 개의 신청도시들 중 중국 북경, 프랑스 파리, 캐나다 토론토, 일본 오사카, 터키 이스탄불 등 5개 도시를 후보로 압축하면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북경에게 2000년 올림픽 유치 실패의 원인이 되었던 인권문제가 여전히 커다란 장애물로 남아 있었다. 엠네스티는 2001년 5월 중국의 인권문제가 더 악화되고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스위스의 체육장관은 올림픽과 인권 문제를 연계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천안문 사태에 대한 생생한 기억은 사라져가고 있었고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중국과의 외교관계를 정상화시키는 등 상황은 1993년과 크게 달랐다. 그리고 중국은 적극적인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통한 지속적인 고도성장으로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경제적 지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었다. 새롭게 등장한 부시행정부도 올림픽 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중국의 인권문제를 맹렬하게 비판하던 1993년의 미국 입장과 비교하면 간접적인 지원이라고도 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시종일관 인권문제의 제기에는 대해 올림픽과 정치를 분리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는 북경이 또 다른 비판의 초점으로 되었던 환경 문제에 대한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유치신청서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대책을 상세히 밝힌 것과는 대비되었다. 사마란치 당시 IOC 위원장은 이러한 중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예를 들면 2001년 2월 신청 도시에 대한 실사를 앞두고 있는 IOC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올림픽 신청도시에 대한 실사는 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조사가 되어야 하며 정치문제를 다루어서는 안된다”는 요지의 서신을 보냈고, 이 편지를 IOC 집행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것도 인권문제에 대해 수세적일 수밖에 없는 중국에게 커다란 힘이 되었다. 그리고 7월 13일 밤 북경시는 압도적인 표차로 2008년 하계올림픽의 주최도시로 결정되었다. 준비된 불꽃놀이와 공연과 함께 1989년에는 비극의 현장이었던 천안문 광장은 드디어 세계가 중국을 인정하였다는 자부심에 가득 찬 군중들의 환호로 뒤덮였다. 이 환호하는 군중들 속으로 장저민 국가주석이 등장하면서 북경의 축제분위기는 절정에 올랐다. 이처럼 자연스럽게 공산당의 최고지도부가 군중들과 함께 하는 것은 중국에서 흔히 있는 일이

아니다. 중국공산당의 국민에 대한 폭력적 진압의 상징이었던 천안문과장이 중국공산당과 국민들이 모처럼 같이 환호를 하는 축제의 장으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올림픽 유치는 같은 해 2001년 11월 중국의 WTO 가입이 이루어진 것과 함께 20년 개방정책의 최대 성과이며 중국의 세계로의 복귀가 완성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당시 가장 많이 외쳐지던 구호 중 하나는 “세계가 중국을 인정했다”라는 것이었다.([http://news.bbc.co.uk/hi/chinese/news/newsid\\_1440000/14406792.stm](http://news.bbc.co.uk/hi/chinese/news/newsid_1440000/14406792.stm))

이처럼 2008년 하계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비판은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중국 내에서는 민족주의적 열망에 압도되었으며, IOC도 이러한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림픽 유치의 성공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인권 문제가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올림픽 유치를 계기로 중국의 인권상황은 더욱 더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게 될 것이다.

### 3. 외부에서 본 중국의 인권 문제 - 중국 인권 문제의 국제화

냉전 시기 인권문제는 자본주의 진영이 사회주의 국가를 비판하는 주요 무기 중 하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 중국과 서방 국가 사이의 관계에서 인권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1972년 키신저와 닉슨의 방중 이후 미국과의 관계정상화가 진행되기 시작하고, 중국이 UN에 가입할 당시에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의 최고조는 지났으나 여전히 정치적 폭력이 일상화되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문제는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 이는 당시 키신저에 의해 대표되던 현실주의적 외교철학이 미국의 대외정책에 반영된 결과였다. 미국과 중국의 체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안보 문제에서의 이해의 일치는 다른 모든 차이를 압도하였다. 닉슨이 마오쩌둥(毛澤東)을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은 한 민족의 내적인 정치철학이 아니라 세계의 다른 부분과 우리에게 대한 그들의 정책”이라는 말은 당시 양국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잘 보여준다.(Burr, 1998, p.64) 이러한 기조는 8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특히 전략적

이유에서이긴 하지만 80년대 초반 레이건 행정부의 등장을 전후로 형성되기 시작한 신냉전체제에서 미국은 소련의 인권 문제를 매우 강력하게 비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인권 문제는 거의 제기하지 않았다.(Ross, 1995, pp.168-169)

그러나 80년대 초반부터 중국의 개방화에 따라 인권 문제가 점차 외부로 노출되기 시작하였고, 중국과 서방 국가들 사이의 새로운 마찰 요인으로 등장하였다. 80년대 제기된 인권 문제는 자유주의적 지식인들의 활동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제재, 티벳에서의 종교활동과 정치활동에 대한 통제, 강제적인 가족계획 등이었다.(Harding, 1992, pp.202-206) 특히 1987년 티벳에서 발생한 유혈사태로 미국의 상원과 유럽의회에서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인권문제가 국제문제로 발전된 결정적인 계기는 1989년 6월의 천안문 사태였다. 이를 계기로 서방의 많은 인권 단체들이 중국의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이들의 영향력이 강한 국가의 경우는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서 인권 문제를 주된 대화 의제로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미국은 80년대와는 달리 1990년부터 국무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인권보고에서 중국의 인권상황을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매년 봄에 개최되는 UN 인권위원회에 1991년을 제외하고 1990년에서 1997년까지 매년 중국 인권문제를 비판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중국의 외교적 노력으로 대부분 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하였다. 또한 미국 내 의회에서 최혜국대우(MFN)를 연장하는 것과 중국의 인권문제를 연계시키라는 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행정부의 보다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갔다. 1993년 새로 대통령에 취임한 클린턴은 부시 행정부의 대중국 인권정책을 비판하고 과거 조건 없이 연장하였던 최혜국대우를 인권상황의 개선 정도와 연계시키는 조건부 연장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이 연계정책은 지속되지는 못하였고 1994년에 5월에 중단되었다.<sup>2)</sup>

2) 램턴(Lampton)은 이 정책의 실패요인으로 위협을 가할 수는 있지만 내부의 입장 차이(주로 경제계에서의 반대)로 인하여 정책의 신뢰성은 낮았다는 점, 서방 세계에서도 확실한 동맹자나 지원을 얻기가 어려웠다는 점, 권력교체기에 있는 중국 지도부가 외부 압력에 약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은 점등을 들었다.(Lampton, 2001, pp.137-138).

90년대 초부터 미국의 국무부 보고서나 앰네스티 등에서 제기하였던 중국의 인권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www.state.gov/g/drl/hr/c1470; web.amnesty.org/ai.nsf/COUNTRIES/CHINA?OpenView&expandall) 우선 중국의 정치체제와 관련된 것으로 중국 공산당이나 정부가 직접적인 비판의 대상이 된다. 중국 내에는 정당이나 개인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80년대 이후 적지 않은 정치범들이 존재하고 있다. 80년대에는 웨이징성(魏京生), 팡리지(龐勵之) 등이, 천안문사태 이후에는 왕단(王丹) 등의 학생운동 지도부들이 상징적인 존재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반대당을 결성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한 체포와 구금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종교활동의 자유로 서방 세계의 주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선교활동이나 종교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방 세계를 이를 종교탄압으로 비판하여 왔다. 현재도 일부 종교인들이 불법적인 선교활동과 관련하여 구금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파룬공(法輪功)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단속이 종교탄압으로 비판받고 있다. 형사재판의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 법적인 근거가 없는 체포, 구금, 그리고 고문 등도 인권 단체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문제들이다. 두 번째로는 중국 정부의 사회, 경제정책과 관련되어 있으나 중국 정부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 없는 문제들이다. 강제적 가족계획, 삼협담 건설로 인한 강제 이주 정책, 그리고 사형제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면 중국의 인구정책 자체는 비판의 대상이 되기 어려우며, 일부에서는 모범적인 정책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다만 인구정책이 지방 행정에 대한 중앙 정부의 평가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관계로 지방 단위에서 지나치게 강제적인 방식이 동원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를 중앙정부만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이나 행위보다는 민간 부분의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되는 경우도 있다. 장기판매, 인신매매 등이 그 예에 해당된다.

90년대 중반부터는 중국의 인권 문제에 비교적 강경한 태도를 취하던 미국도 제재보다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전환은 1996년 클린턴 행정부가 개입(engagement)정책, 포괄적 협력을 대중국정책의 기본노선으로 채택하면서 뚜렷해졌다. 그리고 1997년과 1998년에는 미중간의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인권대화는 계속 이루어졌지만 인권문제를 둘러싼 마찰은 크게 감소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제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없었던 여러 요인과 함께 외교정책에서 인권에만 초점을 맞출 수 없다는 국제정치적 현실이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즉 미국은 인권 이외에 안보, 경제 등의 영역에서 중국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었다.(Lampton, 2001, pp.138-139) 미국은 1998년 UN 인권위원회 총회에서 1992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비판하는 결의문을 상정하지 않았으며 1998년 봄 국무부가 발표한 인권보고에서도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를 하였다.(朱鋒, 2000, p.216) 반면 국제NGO 인권 단체들은 여전히 중국의 인권상황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중국의 주요 지도부들이 해외에 방문할 때마다 천안문의 유혈진압 등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가 항상 등장하고 있으나 각종 인권 단체들의 보고서에서도 중국의 인권 문제를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다. 최근에도 이들의 활동에 의해 중국 내의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인권 정책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그 동안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압력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선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서방세계의 요구가 과연 얼마나 보편적인 것인가이다. 이는 아래에서도 살펴보는 것처럼 중국 정부는 점차 인권의 보편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입장을 취해왔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일반적 가치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서구 세계에서 제기하는 구체적인 요구의 타당성과 관련된 문제이다. 예를 들면 서방 세계에서 중국 인권문제에 대한 비판은 위에서 설명한 성격의 차이를 무시하고 모두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소재를 삼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접근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의 인권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유발하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부작용도 있다.(Nathan, 1999) 둘째로 중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문제제기가 인권 상황의 자체가 목적이기보다는 중국의 성장에 대한 견제 등 다른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압력의 도덕적 정당성을 더욱 떨어트리기도 한다.

#### 4.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

중국은 인권 문제에 대해 전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본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첫째는 인권이 개별 국가의 내정을 간섭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개별 국가의 주권 보호가 국제사회에서 인권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중국이 19세기 이후 열강들의 침략에 의해 커다란 고통을 겪었고, 1949년에야 비로소 외세의 침략에 벗어나 스스로의 민족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다는 역사적 배경으로 인하여 더욱 강조되었다. 둘째는 인권보호를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경우에도 서구적 인권의 개념과는 다른 내용을 더 중시하였다. 예를 들면 식민주의, 인종차별을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권문제로 제기하였으며 인권의 개념에서 발전권을 가장 강조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1971년 UN에 가입한 이후 국제인권체제를 긍정하는 변화를 보여왔다. 무엇보다도 UN의 상임이사국으로서 UN의 인권선언 및 UN의 인권과 관련한 여러 공약 등 국제사회의 합의에 대해 비협조적인 입장만을 취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시작한 이후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졌고, 또 문화대혁명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이 진행되면서 인권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1981년 4월 중국은 UN 인권위원회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그리고 여성차별금지규약(1980.11.4), 모든 형식의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규약(1981.12.29), 난민지위에 관한 규약(1982.8.23),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1982.8.23), 인종학살의 금지와 처벌에 관한 규약(1983.3.5), 인종분리의 금지와 처벌에 관한 규약(1983.5.18), 고문 및 비인도적 굴욕적 처우나 형벌금지조약(1988.9.5) 등 7개의 국제 인권 규약에 가입하였다.(www.humanrights-china.org/china/rqfg/menu\_zgyq.htm). 또한 1986년 중국 외교부장 우쉬에치엔(吳學謙)은 UN총회에서 중국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UN의 두 개의 인권관련 규약에 가입할 의지가 있음을 시사하였다. 비록 일부 국내 주권에 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조항을 유보하는 조건으로 가입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되었고 80년대에는 중국과 국제인권체제 사이에 심각한 마찰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중국은 우선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였고, 이를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다. 특히 당시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의 중국의 이러한 위기의식을 더욱 부채질하였다. 덩소평은 1989년 11월에 “아마 하나의 냉전은 곧 끝날 것이나 다른 두 개의 냉전이 시작되고 있다. 하나는 남방, 제3세계를 겨냥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를 겨냥한 것이다. 서방국은 현재 포연이 없는 3차 대전을 시작하고 있다”(鄧小平文選-第三卷, p.344)며 증가하는 사회주의에 대한 공격에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일부국가들이 체제와 이념이 다른 나라들을 공격하기 위해 인권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제인권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90년대 초반 중국은 그 동안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오던 국제인권체제에 참여를 사실상 중단하였다. UN의 여러 인권 조약에 대한 새로운 참여는 중단되었으며 이미 가입한 인권 조약에서 요구하는 보고서도 거의 제출하지 않았다. 아동권리규약(1990.8.29에 서명, 1992.1.31서명)과 고문반대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만이 예외였다.(Carlson, 2000, p.238)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1994년 미국이 인권문제와 최혜국대우를 연계시키는 정책을 중단한 이후 국제인권체제와 중국 사이의 마찰은 일부 완화되면서 중국도 다시 국제인권체제에 협조적 태도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중국 정부는 인권 문제의 보편성은 다시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1991년 11월 최초로 발표한 인권백서에서 “인권의 보호와 발전과 관련한 UN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의 내용은 주권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데 할애되었다. 그러나 1995년 12월 두 번째로 발표된 인권백서에서는 1994년 4월 당시 외교부장 치엔지천의 발언을 인용하여 “중국은 UN인권선언, 테헤란선언, 발전권선언 및 기타 인권관 관련한 국제 문서를 존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내용 중에서 서구 인권외교에 대한 비판도 크게 줄어들고 중국의 국제인권체제와의 협력이 강조되었다.(www.humanrights-china.org/china/rqft/menu\_zgzf.htm) 90년대 중반 이후 중국 지도부들의 인권문제의 보편성을 인정하는 발언도 증가하였다. 1997년 5월 16일 장저민(江澤民)이 프랑스 시라크와의 정상 회담을 통해 발표한 공동성명에 “인권 보호와 촉진은 UN헌장의 종지와 원칙